

2007년도
국정감사결과보고서

2007. 11.

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

목 차

I . 감사개요	1
1. 목 적	1
2. 감사기간	1
3. 감사실시 대상기관	2
4. 감사반 편성	4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	5
II . 주요감사실시내용	7
1. 과학기술부소관	7
2. 정보통신부소관	50
3. 기상청소관	87
III .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95
1. 과학기술부소관	95
2. 정보통신부소관	110
3. 기상청소관	120
IV . 특기사항	123
1.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활동	123

I. 감사개요

1. 목 적

「헌법」 제61조, 「국회법」 제127조 및 「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」(이하 “국감·조법”이라 함)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,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 : 2007. 10. 17(수) ~ 11. 4(일) (19일간)

가. 중앙감사 : 2007. 10. 17(수) ~ 10. 21(일),

2007. 10. 24(수) ~ 11. 4(일)

나. 지방감사 : 2007. 10. 22(월) ~ 10. 23(화)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(총 64개 기관)

가. 위원회선정기관 : 국감·조법 제7조제1호 해당기관(총 29개 기관)

과학기술부 소관(4)	정보통신부 소관(17)	기상청 소관(8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부 ○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통신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상청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부속기관(2)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중앙과학관 ○ 연구개발특구기획단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부속기관(16)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파연구소 ○ 중앙전파관리소 ○ 우정사업본부 ○ 통신위원회 ○ 정부통합전산센터 ○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○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○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○ 서울체신청 ○ 부산체신청 ○ 충청체신청 ○ 전남체신청 ○ 경북체신청 ○ 전북체신청 ○ 강원체신청 ○ 제주체신청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부속기관(7)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기상연구소 ○ 항공기상관리본부 ○ 부산지방기상청 ○ 광주지방기상청 ○ 대전지방기상청 ○ 강원지방기상청 ○ 제주지방기상청

나. 본회의승인대상기관 : 국감·조법 제7조제4호 해당기관(총 35개 기관)

과학기술부 소관(27)	정보통신부 소관(8)	기상청 소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○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○ 한국원자력의학원 ○ 한국과학재단 ○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○ 기초기술연구회 ○ 한국과학기술연구원 ○ 국가핵융합연구소 (구 핵융합연구센터) ○ 한국천문연구원 ○ 한국생명공학연구원 ○ 한국한의학연구원 ○ 산업기술연구회 ○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○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○ (부설)국가보안기술연구소 ○ 한국식품연구원 ○ 한국전기연구원 ○ 공공기술연구회 ○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○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○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○ 한국지질자원연구원 ○ 한국항공우주연구원 ○ 한국원자력연구원 ○ 한국수력원자력(주)고리원전본부 ○ 한국과학문화재단 ○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정보사회진흥원 ○ 한국정보보호진흥원 ○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○ 정보통신연구진흥원 ○ 한국정보문화진흥원 ○ 한국인터넷진흥원 ○ 한국전파진흥원 ○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	<p>없 음</p>

4. 감사반 편성

감사반장(1인)	임 인 배 위원장	
<p>감사위원 (19인)</p>	<p>유승희위원(대통합민주신당) 강성종위원(") 김근태위원(") 김효석위원(") 변재일위원(") 염동연위원(") 유시민위원(") 이종걸위원(") 홍창선위원(")</p>	<p>김태환위원(한나라당) 강재섭위원(") 김영선위원(") 김희정위원(") 박성범위원(") 박형준위원(") 서상기위원(") 신상진위원(") 심재엽위원(") 류근찬위원(비교섭단체)</p>
<p>사무보조자 (38인)</p>	<p>o 위원회 공무원(10인)</p> <p>수석전문위원 김 춘 엽 전 문 위 원 정 구 복 입 법 조 사 관 김 상 기 " 지 동 하 " 이 화 실 " 이 현 정 " 이 지 연 " 예 승 우 입법조사관보 서 호 진 " 박 제 웅</p>	<p>o 위원보좌관(20인)</p> <p>o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(3인)</p> <p>대통합 정 창 교 민주신당 고 영 기 한나라당 채 성 령</p> <p>o 속기직원(5인)</p> <p>속기주사 이 미 정 속기주사 이 봉 선 속기주사보 한 연 미 속기서기 김 윤 정 속기서기보 서 상 경</p>
<p>계</p>	<p>총 58인</p>	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 자	시간	대 상 기 관	장 소	비 고
10.17(수)	10:00	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	과학기술부 회 의 실	
10.18(목)	10:00	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원회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서울체신청, 부산체신청 충청체신청, 경북체신청 전남체신청, 전북체신청 강원체신청, 제주체신청	정보통신부 회 의 실	
10.19(금)	10:00	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항공기상관리본부 부산지방기상청,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,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	기 상 청 회 의 실	
10.22(월)	10:00	기초기술연구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	한국생명공학연구원 회의실	※ 지방감사 (대전) ※ 오찬 후 대덕단지 보육시설 시찰

일시	시간	대상기관	장소	비고
10.23(화)	10:00	산업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(부설)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	한국전자통신연구원 회의실	※ 지방감사 (대전)
10.24(수)		※ 자료정리 및 감사준비		
10.25(목) 10:00	10:00	공공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	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회의실	
10.26(금) 10:00	10:00	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(주) 고리원전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	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회의실	
10.29(월) 10:00	10:00	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	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회의실	
10.30(화) 10:00	10:00	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	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회의실	
10.31(수)		※ 자료정리 및 감사준비		
11. 1(목) 10:00	10:00	과학기술부 기상청	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회의실	※ 종합감사
11. 2(금) 10:00	10:00	정보통신부	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회의실	※ 종합감사

Ⅱ. 주요감사실시내용

1. 과학기술부소관

가. 과학기술부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과학기술 행정분야	<p><소관위원회 운영 관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기부 소관 법정위원회의 위촉직 비율을 상향시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○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다른 심의기관에 그 역할을 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 <p><학력위조 방지시스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기부 산하기관의 학력검증시스템 구축현황 ○ 개도국 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력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<p><국감향응 보도관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국감 향응 보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실제적 진실에 대한 소명 필요 	
기초과학 연구분야	<p><뇌연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뇌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 ○ 뇌연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는지 여부 ○ '08년에 국립 뇌연구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<p><기초연구투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보고서의 기초투자 비중과 과기부 홈페이지의 기초투자 비중이 상이함. 통계자료 작성시 출처나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○ 기초연구는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중요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○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경우 당초 약속한 '08년까지 금액 2.5배 증가, 연구인력 1.8배 증가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목표에 대한 정량적평가가 없음</p> <p>○기초연구비중 25.6%의 구체적 내용이 없음</p> <p><창의적연구진흥></p> <p>○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경우 과제탈락율을 20%로 정하고 있는데, 연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탈락율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함.</p> <p>○과제 수행 중 연구목표를 수정하고자 하나 수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.</p> <p>○사업구조를 예비연구단계와 본연구단계로 나누어 예비단계에서는 많은 과제에 대해 소액을 지원하고, 본연구단계에서는 이 중 일부 탈락시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</p> <p><프론티어사업></p> <p>○프론티어사업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장 공개채용이 필요하며, 프론티어 사업단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법인화 필요</p> <p>○프론티어 사업단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(사업의 실용성, 계획성 등)이 필요함</p> <p>○프론티어21 사업 관련, 데이터 파일을 하면서 성과를 측정하라고 지적하였음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</p> <p><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></p> <p>○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기초비중 25%라는 목표치의 존재 이유</p> <p>○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중복투자 심의 등에 관한 실적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나노기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노기술에 대한 기대치에 비해 핵심인력이 부족함. 전문인력 수급방법은? <p><우주기술개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주사업의 잦은 사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신뢰성 확보 필요 ○ 다목적실용위성의 영상판매실적 ○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영상판매 계약내용에 대한 과기부의 철저한 검토 촉구 <p><과제중도탈락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도탈락 과제 연구비(100억원)의 사용용도 ○ 연구 책임자가 이직해도 연구과제는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음 ○ 중도탈락 과제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 필요 <p><연구기자재구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기자재 구입관련, 과제종료 2개월전 구입 실적이 많음 	
원자력분야	<p><사용후핵연료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6년경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현황 및 관련 연구개발 실태를 점검하여,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 <p><방사성 폐기물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전은 전국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1/4을 임시보관하고 있으나 경주에 비해 지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직·간접 보상책 마련이 필요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○'88년 이후 건설된 고리 4호기 중·저준위 임시 저장고는 내진설계가 반영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전에 지어진 임시저장고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</p> <p><원자력안전 및 확보></p> <p>○한전전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 (10Km) 내의 주민 87%가 방사선 비상계획시 소개에 대한 사전 교육 훈련 경험이 없고 88.7%가 대피장소를 모르는 실정임. 따라서 비상시 주민 교육 대책이 필요함</p> <p>○신월성 1·2호기 부지 안전성과 관련하여 한수원의 「근거리 지진원 영향분석보고서」에 대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의 의견을 제출할 것</p> <p><원자력(연) 우라늄 분실건 관련></p> <p>○핵물질관리의 총체적 부실 문제해결을 위해 6대중점과제를 추진중인데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</p> <p>○원자력(연)내 폐기물관리가 아직도 허술하고 지정폐기물 담당자도 핵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등 여전히 완전한 재발방지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</p> <p>○소량우라늄 분실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재구성 및 분실 우라늄의 정확한 경로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원자력(연)은 사건 발생 후 4시간 이내 보고토록 되어 있고 과기부 고시에는 사후 곧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규정이 상이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<p>과학기술 기반분야</p>	<p><과학올림피아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병역관련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이 기초과학분야의 학업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병무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○ 과학올림피아드가 입시 및 의대진학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. 또 최근 발의된 병역특례 방안 중 의대진학자는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도록 실험·토론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<p><과학영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영재 발굴육성 계획은 교육부의 전체 영재교육체계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, 교육부 사업과 중복여부 검토 필요 ○ 과기부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투자 필요성, 과도한 사교육 조장우려 등에 대한 검토 필요 ○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1인당 지원경비 과다함 ○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부산시 학생감소 및 부산의 재정지원 부담 문제제기 및 운영비 효율성 등 때문에 동 학교 운영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 일원화된 운영체계로의 개편 필요성 등 검토요망 ○ 각 지자체의 과학영재학교 추가지정 움직임이 있는데,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두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우수인력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 ○ 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본래 취지를 잃고 이름만 바꾸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○ 이공계국가장학사업 지원대상의 지역편중(서울·대전 비율 65% 과다)은 국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위배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○ 신규 지방학생 사업의 경우 등록금 50%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, 특화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클러스터와 연계하거나 지역별 할당 등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</p> <p><엔지니어링·기술사 분야></p> <p>○ 한-EU FTA 관련 기초적인 시장검토 등 사전 조사 및 전략 미흡 등 사전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협상을 추진하는 등 문제</p> <p>○ FTA 관련 추진상황 및 관련 자료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, 관련기관과도 공유 되지 않음</p> <p>○ EU 국가별 제도차이와 미국의 주별 제도 차이에 따라 기술사 상호인정시 우리 기술사의 진출에 2중 장벽이 되는 문제가 있음</p> <p>○ 기술사종합관리체계와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 관리는 중복되는 사업이므로 단일화 필요</p> <p>○ 엔지니어링 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관련, '06년도 지원한 14개 업체 중 11개 업체를 '07년에 다시 선정하는 등 문제</p> <p>○ 해외프로젝트 개발조사사업은 수주성공사례 등의 구체적인 사업성과도 미미함</p> <p><전문경력인사활용></p> <p>○ 전문경력인사활용사업으로 지원한 인사중 48%가 이·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며, 이·공학을 전공했으면서 출연연에 속하지 않는 과학계 인사는 겨우 2%(7명)에 불과해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이 운영됨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R&D인력교육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&D 인력교육원 관련, 고등과학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업비로 기관설립이 이루어진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이므로 관계 공무원의 문책 요구 <p><과학기술인공제회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제회 지원사업에 국방과학(연)이 제외되어 있음 ○ 고갈이 우려되는 과학진흥기금을 예산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공제회 운영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만한 운영이 우려됨. <p><과학문화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카이라이프는 보편적 채널이 아니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○ 콘텐츠 부족, 편성표 상 6번의 재방송, 시청률 0.02% 등을 고려할 때 사이언스 TV출범은 문제가 있음. 차라리 기존 국영 방송을 이용하여 과학프로그램을 방영하거나 지상파 방송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수요를 넓힌 후 방송국을 출범하는 것이 좋았을 것임 ○ 사이언스 TV에 일기예보 등 기상청을 참여시켜 국민의 관심을 끄는 등 보완책 필요 ○ 과학문화도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연구실안전관리 관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실안전과가 관리하는 연구실이 3,444개인데 이행사항을 점검한 기관은 48개 기관이며 안전관리규정 작성은 35개 기관에 불과한 바, 3,444개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	
국제협력분야	<p><국제화기반조성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EU-FP 사업이 과기부 행정지원의 문제로 사업 효율성 문제 및 국가적 신뢰 손상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, 이와 관련 향후 FP의 연구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, 참여 연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연구활성화를 위한 과기부의 대책 요청 <p><동북아 R&D허브기반구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 연구기관의 직접투자, 인적교류, 기술이전이 미흡하여 선진 과학기술이 국내에 미이전 ○ 기유치된 해외우수연구기관에 외국인연구원이 유입될 수 있는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, 정부차원의 주거문화, 교육시설 등의 환경 조성 필요 ○ 해외우수연구센터 유치가 실질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 필요 <p><남북과학기술협력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북 쌍방의 즉각적 이익 도모를 위한 기상분야 협력의 우선 추진과 첨단기술분야 협력에 대한 견해 ○ 북측과 과기분야에서 상시적, 안정적 별도 채널 확보 당부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FTA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FTA 협상은 국가의 기본노선임에도 불구하고, 국가적 대응체제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공유되어 있지 못하고 절차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 ○ EU의 경우, 이중장벽에 대한 전략없이 개방하고 있는 건 아닌지,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급부 확보 필요 ○ FTA 타결시점이 아닌데, 이에 대한 견해 ○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FTA 안건이 없고 외교부의 전문가 자문단에도 과학기술 분과 없는데, FTA 성과에 대한 대책 필요 	
<p>출연기관 육성 및 연구개발 조정분야</p>	<p><비정규직문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동부가 연구회 소속 212명, 직할기관 156명 정규직 전환 인원을 할당한 것으로 보고 ○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성격에 따라 해결하고 부담이 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므로 실태를 파악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○ 비정규직 인원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예외조항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음. ○ 출연(연)의 비정규직이 56%이고 비정규직에서 연구직이 41%, 연구직에서 박사학위소지자는 20.2%임.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 ○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. 이에 대한 과기부의 의견 제시가 필요함 <p><유공자 대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양(연) 故전재규 대원이 순직한 다음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자격이 아닌 단순 의사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미래성장동력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7년 POST 10대 신성장동력계획이 2009년 시행예정인데,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준비나 보완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음 ○ POST 신성장 기획이나 론칭을 중단하고 철저한 리뷰나 사업을 보완할 용의는? ○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육성과 투자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, 미래 성장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망 ○ 차세대신성장동력산업은 부총리체제가 출범하면서 과기부가 총괄·지휘하고 있는데, 당초 제시한 목표보다 성과가 미흡함 <p><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, 안정성 및 인프라 등이 필요한데, 위그선의 경우 중국과의 운항합의 여부 및 위그선 실용화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, 의견수렴이 필요함 ○ 대형위그선사업 선정시 당초보다 현재 참여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여부 <p><출연기관 육성 지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(연) 자체수익이 축소 편성되어 있고, 자체 수익금 또한 규정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○ 과학재단에서 ICU에 지원되는 장학금에 문제가 있음 ○ 출연(연) 복리후생비 지급관련, 노동조합 일괄 위탁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실태파악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출연기관이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해 대학이나 민간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데,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 ○ 출연(연) 연구원들이 경쟁과제 수주실적으로 평가받지 않고 연구내용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선 필요 	
<p>과학기술 정책분야</p>	<p><이공계 인력육성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공계 기피심화, 이공계 졸업자들의 타분야 진출 가속화, 이공계 교수의 충원을 저조 등 이공계 인력 육성·지원 시책의 효과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○ 이공계 진학률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○ 참여정부의 많은 과학기술정책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이 증원되지 않는 원인 및 해외 박사 취득자들의 귀국 비율이 낮은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○ 과학기술 인력 공급 체계를 양적 양성에서 질적 양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○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고급 연구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정부차원의 연구 관련 일자리 창출, 국가 인증 과학자에 대한 정년보장, 연금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<p><여성과학기술인 육성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과학기술인육성법이 제정되었으나, 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·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필요 ○ 적극적 조치 등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및 향후 대책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○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</p> <p><일자리 창출></p> <p>○ 일자리 창출 실적에 신규고용인원 외에 계속 참여인원을 포함하여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</p> <p>○ 과기분야 일자리창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</p> <p>○ 일자리창출 실적을 목표 대비 96.6%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은 바이오신약 장기사업, 세포응용연구사업 등 모든 사업에서 다 과장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</p> <p><기술유출></p> <p>○ 기술유출 문제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</p> <p>○ ‘산업기술유출방지법’ 개정과 관련, 과기부에서 ‘(가칭)사전기술영향평가제도’를 만들어 국가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검토 후 M&A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</p> <p>○ 첨단 기술유출 관련,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. 과기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</p> <p><수학·과학 경쟁력 강화></p> <p>○ 8차 교육과정에서 수학·과학 교육이 선택과목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. 기초과학의 경우 교육부와의 연계가 중요한데,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과학기술분야 기본계획 점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’상의 8개 정량적 목표치에 대한 성과점검 필요 <p><해외 R&D센터 유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의 R&D센터가 들어올 유인이 없는 상태로, 동북아 R&D허브 전략에 대한 성과가 미약한 것에 대한 대책 필요 	
국가R&D사업 관리평가분야	<p><연구개발사업 관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SCI논문 인용 실적이 저조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질적평가 강화 대책 필요 ○ IMD 과학·기술 ‘경쟁력’은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인프라를 평가한 순위표에 불과한데 이를 우리나라 과학·기술경쟁력 도약으로 홍보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는 지적 ○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인명의 특허등록에 대하여 환원 대상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진하고 미환원 특허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한 것에 대한 개선 필요 ○ 과학기술부 소관 개인명의 특허의 명의환원이 저조함. 특허관리 개선 필요 ○ 기관 구성원 전체의 인센티브로 연동되는 기관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견해 ○ 출연(연) 보유 미활용 특허의 활용방안 검토 필요 ○ 사업에 맞는 평가기준 설정 및 성과검증시스템 구축 검토 필요 ○ 출연(연) 성과관리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도 많고,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임 ○ 과기부, 출연기관 전산시스템 상 데이터에 차이가 있어 통계에 오류가 있음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과학관분야	<p><국립중앙과학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은퇴과학자, 과학교사, 고학력여성인력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과학관전문가 양성사업 추진필요 ○ 지역특색에 맞으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증대하기 위한 특성화된 과학관 필요 	
연구개발특구육성분야	<p><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에 대한 입장 ○ 내륙거점도시, 연담광역도시 등 특구확대를 위한 특구법 개정에 대한 견해 ○ 특구 추가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<p><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추진 현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성공모델 창출 위한 정부의 대덕특구에 대한 집중투자 촉구 ○ 연구소기업설립, 출연연 기술사업화 저조 등 특구육성 성과 부진 ○ 특구내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이 부진함. 향후 외자기업 유치계획은? ○ 특구내 기업의 만족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○ 대덕 R&D특구 자체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, 또 타지역으로의 성과확산을 위해서 오성, 아산 산업단지 등 인근지역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	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분야	<p><자문회의 운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문회의는 헌법상 기구인데 회의개최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 및 회의 시 대리사인 등에 대한 의혹 해명 ○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학·과학교육 등과 같은 중요 과학기술 정책에 자문보고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○ 자문회의 대통령 자문보고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. 	

나. 기초기술연구회 소관

1) 기초기술연구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출연(연) 원장 연봉 인상 적극추진 필요 ○ 우수한 인력을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노력 필요 ○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사업비의 비율을 높이는 등 PBS제도 개선 노력 필요 	
정책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본사업의 연구책임자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 	

2) 한국과학기술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PCT 특허는 43건인데, 삼극특허는 3건에 불과한데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필요 ○ 2011년 기술료 100억원 달성가능성 및 기술이전 활성화 대책 마련 ○ 논문 성과 목표치가 도전적이라기 보다는 무난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 됨. KIST 위상에 걸맞는 학술 성과목표 설정 필요. 아울러 주도적인 연구를 통해 주저자와 책임저자의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 ○ 논문성과가 SCI는 높아지고 있으나 IF는 낮아지고 있음. 양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동 재건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L5연구동 공사의 예산정책에 따른 지연여부? ○ KIST 노후연구동 구조안전관리 실태 및 향후 대책 ○ 현재의 한정된 부지와 건축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시설확장성이 차단되어 있는 바, 연구소 이전을 포함한 종합적 대처 방안 검토 	
인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인력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, 이러한 현상을 감소시키고, 생계 걱정없이 안정적인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○ KIST 박사급 연구원 이직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국내대학으로 이직하는데 대한 원인 및 대책 ○ 고용휴직중인 과기부 공무원이 KIST 나노소자특화팩센터의 별정직으로 채용된 사유 ○ KIST 청원경찰이 왜 아웃소싱이 안되는가? 방호임무를 수행하는 직군에 대한 향후 계획 	
분원설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천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인 KIST 전북분원의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었는데, 대규모 사업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됨. 	
우수인력 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 R&D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인력양성도 중요하나 국내 우수 연구인력부터 유치, 양성, 신분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	
국제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IST 유럽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계획 및 방안, 제2연구동을 활용하여 국내 연구주체의 EU 진출을 지원하기위한 추진 계획 및 방안 	
감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임감사의 판공비 사용액 중 감사원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가 대부분임 	

3) 국가핵융합연구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경영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수리(연), 천문(연)의 경우에 비해 기관들이 안정적 연구비 비중이 대체로 낮으며, 국가핵융합연구소의 경우 안정연구비 비중이 크게 낮은 것에 대한 방안 ○중요 국가시설로서 보안등급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며, 시설 방문 및 출입자관리 등의 절차 검토 및 철저 이행 필요 ○ICU 임차 사용과 관련하여 무상 출연하는 계획 추진 검토 	
연구개발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KSTAR 성공적 운영 및 ITER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원천기술을 선점하여 향후 핵융합발전소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확보 방안 수립 ○연구인력 확보 차원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력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연구인력 확보 방안 수립 ○핵융합 연구의 실험추진계획 등 기술개발로드맵을 포함하여 구체적 목표 달성계획과 경제 비용, 안정성문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	
정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ITER 국제공동개발사업의 국내 전담기구지정, 중요 보안대상 기관 지정, 기기 공동 활용을 지향하는 개방형 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의 상충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독립법인화에 대한 계획 검토 필요 	
사업수행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KSTAR가 완공되었지만 현재 부대장치로는 플라즈마 온도를 목표치 3억도까지 올릴 수 없다고 알고 있음. 추가 부대장치 개발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필요 ○KSTAR 부대장치 개발을 위해 미국, 일본과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음. 일본에서 일부 부대장치 개발하여 '08년에 우리나라로 이전하는데, 운송비와 설치비 등 예산이 없어 수행이 안되는 상황임.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 예산확보 대책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국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장치운영 지연 우려 등을 반면교사로 보아 운영비 예산 관련 대응현황 설명 ○ ITER 공동건설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연구 성과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으며, 우리나라 지분을 확보할 명확한 근거 설명 	
홍보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STAR와 ITER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음. 이에 대한 연구소의 대응 설명 	

4) 한국천문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우주측지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한이 이동식 SLR 시스템을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다는 정보입수과정과 정보보고 기관 및 방법 제시 ○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향후 GPS를 갈릴레오로 대체할 것인지, 병행하여 사용 할 것인지 향후 계획 및 GPS와 갈릴레오 우수성 비교 ○ 우리나라는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만 했지 이익을 얻는 데는 제외된 것으로 보임. 이에 대한 대책 방안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른 나라 위성이 우리나라 영공을 차지하고, 우리나라 위성은 다른 나라 상공에 위치. 우리의 영공문제 대책 필요 ○ ‘우주감시체계 구축’을 TOP Bran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이에 대한 연구 수행을 하는데 애로사항 	
우주과학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천문(연)에서는 인공위성의 궤도정보 확보를 위해 조치 필요 ○ 천문(연)에서 과기부나 우리나라 공군에 NORAD의 정보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협조요청 여부 	
광학천문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천문학에서 광학관측이 핵심이므로 연구장비 확보가 중요함.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천문연의 수준과 경쟁력은? ○ 천문연의 경쟁력을 위해 대형망원경 확보가 핵심임. 이에 대해 향후 대책 방안 필요 ○ 6.5m 대형망원경 사업이 무산된 이후 대책 필요 ○ 천문학 연구의 발전을 위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니 천문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람 ○ 천문대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등 관리 문제 검토 필요 ○ 천문대의 관리부실 또는 여건 부실이 연구결과 부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. 이에 대한 개선 필요 	
혁신정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천문연의 천문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고급인력 유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발전 전략 수립 필요 	

5) 한국생명공학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인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PBS 제도 등으로 인한 연구원 소속 대학으로 이직(유출)이 늘어 출연(연)의 큰 현안임. 우수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 ○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에서 제외된 인력에 대한 근로안정에 노력 필요 	
기본연구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(연)의 연구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연구 환경조성을 위해 기본연구사업의 재원확보와 연구책임자 잦은 교체 지양 	
생명공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바이오신약개발에 필요한 인력, 예산 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며, 향후 FTA 타결 이후 신약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 필요 ○ BT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세계시장 및 틈새시장을 공략, 생명(연)만의 경쟁력있는 기술개발 필요 ○ LMO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와 향후 상업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환경 및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엄격한 관리체계 필요 ○ 줄기세포 연구분야에 있어, 생명(연)의 역할 정립 및 생명윤리법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	
생물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물자원 정보 및 생명자원 관리와 정보활용 체계 구축 등 국가 생물자원 확보·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필요 	
연구자원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험동물이 실험보다 실험외(자연사, 사고사 등) 소진되는 경우가 많음. '08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, 연구자원 관리와 제도 개선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 타	○ 감염성폐기물관리대장의 관리가 미흡하여,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	

6) 한국한의학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형 체질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학계 전체가 참여하여 연구기간을 단축하고, 지원을 통해 실효성이 제고되기 바람 ○ 일반 국민들이 한의학의 예방의학적 특성을 알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, 유관기관과의 협력임상연구를 이제마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그 효능을 입증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기 바람 ○ 서양의 개인 맞춤의학 성과 미진으로 인해 상의학의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○ 한의학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과학적 data를 축적하고, 근거중심의학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 	
정책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의학의 과학성 입증과 세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및 한의학 관련 파생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바람 ○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회·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한미FTA시대에 세계속의 한의학으로 발전하기 바람 ○ 중국의 전국가적 중의학 브랜드화 노력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	
기관운영	○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비율 미충족시 부담금을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납부하여야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사과제 이중사용 등 법인카드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보기 바람 	

다. 산업기술연구회

1) 산업기술연구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개 연구회 운영체제가 비효율적이므로 통합을 고려하는 등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. ○ 연구기관 예산수립시 자체수입 축소계상으로 인해 능률성과급 지급재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 ○ 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연구기관 직원은 사기진작을 추진하고 있으나, 기관장들 처우개선은 안되고 있는 바, 연구기관장의 연봉수준을 개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임. 	

2) 한국생산기술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조직/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센터가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기업 및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지역센터 유치를 희망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 필요 ○ 대구 경북지역에 섬유 산업 등에 대한 생기연의 지원이 필요 	
연구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Top Brand Project인 “Cyber engineer U24” 사업이 향후 스타 프로젝트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○ 차세대 성장동력인 로봇산업에 대해 3개부처 간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음. 집중적인 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노력 필요 ○ 산업화의 기본은 특허등록에 있으므로 해외출원 및 등록 실적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	
인사/구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인력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시정 방안 등을 마련하여 연구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 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시행령)에 따라 공개경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비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책마련이 필요 ○ 과다지급된 기관장 보수(감사원 감사결과)에 대한 환수 노력 필요 	

3) 한국전자통신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T융합부품연구소는 2007년 및 2008년 상반기에 연구사업의 상당부분이 종료되므로 신규과제 확보하기 위한 방안 필요 	
연구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허등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, 미활용되는 특허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연구성과가 사업화,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휴면특허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○ WiBro의 국제표준 채택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/고용창출 등의 분석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음 ○ 장애우 관련 기술개발에 1,957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은 23개에 불과하고, 기술이전실적도 저조함. 장애우가 개발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 노력 필요 	
인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우 의무고용비율(2%)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. ○ ETRI의 퇴직인력 상당부분이 대학으로 이직하는 상황이므로, 연구원 신분 안정화 대책 등의 수립·추진 필요 	
정책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속없는 MOU 난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 협력방안이 필요함. 	

4) 국가보안기술연구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6년도 국가 공공기관의 악성코드 등 사이버침해 건수(4,286건)가 증가하였는데,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노력 필요 ○ CDMA 휴대전화의 감청 및 개인 인터넷 이메일 감청의 기술적 가능성 ○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과 수탁사업의 비율 	
관리감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안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, 과학기술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므로 자료 제출에 있어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보안유지를 요구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정감사에 보다 성실히 임하여 주기 바람. 	

5) 한국식품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국장 등 식품의 효능평가에 있어 과학적 데이터의 뒷받침이 필요함 ○ 인삼, 김치 등의 수출증대에 직결될 수 있는 국제표준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	
정책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FTA에 대한 대응과 식품업체의 지적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인사관리	○ 책임급 50% · 비정규직 50%의 고용구조에 따른 연구의 연속성 확보와 여성 ·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	
산업안전	○ 실험후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	

라. 공공기술연구회 소관

1) 공공기술연구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획예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출연(연) 원장 연봉 인상 적극추진 필요 ○ 스타프로젝트 등 대표적 사업책임자의 처우개선(연봉 인상등) 필요 ○ 여성 및 장애인력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○ 영년직제도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○ 정부출연(연)이 자체수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매년 자체수입 초과액이 증가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○ 정부출연(연) 자체수입 초과액을 능률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한 개선 필요 	
성과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MOU의 후속성과(기관간 실질적 교류성과등) 개선 노력 필요 ○ 저조한 특허활용률을 개선할 대책 필요 ○ 성과관리 전담인력 강화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노력 등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출연(연) 발전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흡점 개선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정적 평가관행 시정, 정량적 통계자료 정확성 제고 - 특허, 실용화, 국제협력 등 기관의 저조한 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·반영 필요 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출연(연) 제출자료간 불일치 조정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필요 ○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감사임명시, 감사경력이 나 과학기술분야의 경력이 없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를 임명한 이유 	

2)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위탁연구과제의 수의계약이 타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짐. 이는 합리적 과제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책 강구 ○'07년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관련 지적사항 중 NTIS사업 협약이 지연된 사유 확인 보고 ○1인당 연구비에 비해 연구성과 부분이 타기관에 비해 저조함.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○특허출원·등록비용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나 이에 비해 사업화 등 특허활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.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, 휴면특허의 유지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휴면을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히 활용통계 부실로 과기부 자료와 출연(연) 자료가 상이함. 이에 대한 원인과 개선대책 필요 ○ 기본사업의 사업 진행중 연구책임자 변경은 기관의 부주의와 연구자의 무책임한 처사이므로 연구책임자 변경 지양 ○ 초과수입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자체수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편성 필요 	
연구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NTIS 사업 추진이 다소 미흡함. 향후, 효과적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 ○ 슈퍼컴퓨터 관련 응용 연구의 미약한 지원 및 슈퍼컴퓨팅 관련 활용 교육의 열악함 등의 이유로 동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. 차세대 핵심 분야로 슈퍼컴퓨팅 분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할 것 ○ 과학기술분야의 정보보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, 관련 부처 및 연구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적극적 추진방안을 강구 	

3) 한국건설기술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분야	<p><신기술 검증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설 및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러한 건설관련 신기술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터널시설 유지관리 관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터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구조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노력 및 대책 질의 <p><경부운하 관련연구 및 견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부운하와 연구원 연구과제의 결과 차이 질의 ○ 경부운하의 비용편익비율에 대한 견해 질의 ○ 하천정비 및 생태복원 기술의 경부운하 적용 가능성 질의 <p><교량 내진관련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교의 내진관련 연구개발 및 시공에 대한 필요성 및 연구수행 상황 질의 <p><기후변화에 의한 슈퍼태풍 관련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슈퍼 태풍이 내습하여 한반도를 덮칠 경우 우리의 대책과 구체적으로 슈퍼태풍이 우리나라 최대 사력댐인 소양강 다목적 댐 유역에서 발생했을 때의 대책 질의 	
연구성과분야	<p>< 미활용기술 활용관련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허 활용건수 등 통계 자료가 맞지 않음.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과약과 개선대책이 필요 ○ 연구를 할 때, 직무발명 단계에서 사업화 유망 기술인지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발굴하고, 출원 전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특허출원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휴면특허가 될 가능성을 줄이도록 대책 강구 ○ 연구원에서 특허를 보유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으며 활용을 위한 대책 강구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감사분야	<p><민원업무관련 비리에 대한 후속대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리사건 관련 업무의 이관이 아닌 비리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	

4)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사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북철도 개통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와 경의선 개보수비용에 대한 질의응답 ○ 틸팅열차를 북한에 투입하는 데에 따른 애로점 ○ 대륙간 철도 구축으로 물류비용 및 운송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으나, 국가별 표준계와 광계가 혼재된 문제점이 있어 궤간가변장치의 개발 중요성 제시 ○ 철도는 다른 토목구조물보다 내진설계 반영비용이 낮으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 ○ 한국형틸팅열차의 일반EMU 대비 우수성 제시 ○ 한국형틸팅열차의 2014년 양산 도입이 가능함에 따라 호남선 준고속전철화 사업에 투입 검토 필요 	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허등록 및 사업화율 자료작성의 정확도 제고 ○ 휴면특허의 유지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휴면특허 가능성을 줄이도록 대책 강구 ○ 자체수입을 가능한 정확하게 추산하여 편성하고 연구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책임자 선정시 인사계획, 연구책임자 자질 등 충분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쳐 이탈을 방지 ○ 여성과학자 채용 권고안에 따라 여성 과학자 인력의 채용 확대 필요 	

5) 한국지질자원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운영	<p><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계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(연)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경상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필요 <p><신진연구자 채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타 출연기관에 비해 연구직 평균연령이 45.7세로 높고, 직급별 인원이 상위 직급에 분포되어 있음. 중장기적 인력자원 확보 및 운용 차원에서 신진 연구자의 채용확대의 필요성 <p><예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(연), 능률성과급 더 타내려 자체수입 축소편성 의혹 관련하여 자체수입예산 축소편성 현황 및 원인, 능률성과급 차등지급 현황 검토 	
연구분야	<p><지하공간 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광물자원 포털사이트를 운용 중에 있는데, 지하공간의 전선(Cable)관리, 토양오염/토양이용도 까지 포함해서 지하공간 이용 및 관리/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총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대한 검토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남북한 공동 자연재해 대응방안> ○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 관련과 관련하여 자연재해 대응 위한 남북한 공동대응방안 검토</p> <p><남북한 광물자원 협력> ○ 남북한 광물자원 협력 검토</p> <p><연구책임자 교체> ○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 및 문제점, 개선대책 검토</p> <p><특허 미활용> ○ 특허출원·등록대비 활용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및 개선대책, 특허 통계 오류의 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</p> <p><가스하이드레이트> ○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기술적 생산가능성과 경제적 사업타당성과 관련하여 경제성을 제고하고 위한 연구 지속 필요</p>	

6) 한국항공우주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연구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주발사체 사업지연에 따른 2008년 발사가능 여부 및 상세설계자료(CDP), 상세설계회의 개최 시기에 대한 지적 ○ 향후 우주센터 활용에 대한 문제 지적과 그에 대한 계획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같은 고도이면서 무게가 가벼운 위성(다목적 실용위성 1호)의 발사비용이 더 소요된 사유 ○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궤도 및 주파수 확보 ○ ‘다목적실용위성2호’의 영상판매 실적에 대한 질의와 그에 따른 향후 대책 ○ ‘한국 우주인 배출사업’의 의미와 과학실험의 구체적 임무 ○ ‘한국 우주인 배출사업’의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에 대한 채원조달의 차질발생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 ○ ‘한국 우주인 배출사업’이 대국민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홍보 성과가 미약하고, 관계 활동도 미비함 ○ 연구개발사업(위성, 발사체, 우주센터)의 기간 및 예산의 잦은 변경에 대한 지적 ○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계획 ○ 달 탐사 위성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 ○ 반디호 개발이 순수 국내기술인지 여부에 대한 지적과 함께 미국 수출현황 및 계약조건 질의 	
사업 및 성과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정적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출연(연) 연구책임자들과 연구원의 잦은 교체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 ○ 특허출원·등록대비 활용율이 저조한 이유와 개선책 ○ 특허 관련 통계수치가 다르게 발생한 원인과 그에 대한 개선책 ○ 휴면특허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 ○ 예산편성시 자체수입의 과소평가 편성의 원인과 향후 조치계획 ○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문제 지적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인에 대한 연구원 출입증 발급현황 및 관련 절차 준수에 대한 지적 ○ 홈페이지(우주로) 콘텐츠의 갱신 및 관리 필요성 지적 	

마. 직할출연기관 및 원자력관련기관 등

1)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 및 기술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KISTEP의 역할 및 위원회 규모 ○ 새 정부 수립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의 연속성 문제 해결책 여부 	
R&D 평가 및 예산 조정·배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&D예산의 기초연구비 투자('05년 대비 '06년 기준) 중 순수연구개발 분야는 감소한 반면 복합연구활동 분야는 증가한 원인 	
연구개발인력 교육원 설립 및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설기관인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(기획예산처와의 예산 협의 내용, 인력의 전문성, 공간)의 국회 보고 여부 	

2) 한국과학문화재단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사이언스TV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청율이 낮은 사이언스TV 보다 공중파 방송에 지원하는 것이 과학문화확산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, 공중파 방송지원이 없어지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면서 시청자들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시청의 폭이 좁아졌음. 이 문제에 대한 개선노력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방송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스카이라이프 외의 시청수단 확보가 필요함. 공익성 채널 선정을 통해 케이블 SO에 진입하도록 추진 필요 ○ 방송이 서둘러서 출범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예산낭비가 되고, 일반방송을 통해서 잘 나가던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 방영이 안 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○ 기상방송과 공동운영하는 방안 강구 필요. 전향적으로 사이언스 TV 속에 상당부분이 기상방송물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○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,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대단히 중요함. 또한, 사이언스TV 콘텐츠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○ 사이언스TV 콘텐츠의 학교교육 연계 및 다(多)매체 활용사업 추진 필요 	
과학문화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문화도시 사업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실효성에 대해 조사 바람 	
과학실험 동영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실험 동영상 활용방안 강구 및 저작권 확보 필요 	
과학기자 해외연수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자 해외연수지원 사업이 인쇄매체콘텐츠풀 구축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위성이 없어 보이며, 1명씩 선발해 연수지원하는 것이 과학보도 활성화의 방안이 될 수 없음. 이에 대한 시정 필요 ○ 과학기자 해외연수지원 사업에서 선임급 부장 연수지원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음. 또한, 경쟁률이 2대 1에 불과해 지원공고를 제대로 안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듦. 이에 대한 시정 필요 	

3) 한국과학재단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사업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 질적 성장을 위해 고위험- 혁신적 연구나 융합연구 등에 대한 추진 및 소외분야가 발생치 않도록 과제선정방식 개선 노력 요망 ○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중 이공계 진출학생의 저조 현상에 대한 대책 ○ 기초과학연구사업관련 연구수요 대 예산공급 분석을 통한 실질적 기초연구예산 지원 방안 강구 ○ 이공계장학사업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종합대책 및 장학금 일부 대학 편중현상 개선 방안 ○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유도를 위한 이공계장학사업 실효성 여부와 개선 방안 ○ 이공계장학사업 관련 ICU에 기부금 형식지원 문제 ○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이 일부 선진국에 편중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 ○ 전문경력인사사업 과학기술계 인사의 선정현황 및 대책 ○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단과제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 대책 	
사업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의 탈락률이 낮은 것과 관련 사후관리 소홀대책 	
기관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단 현 감사 경력이 감사직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	

4) 한국원자력의학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관차원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종합적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의료 지원 등 복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마련 필요 	
감사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치권 출신의 감사 선임 부적절 ○ 감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부당한 집행부분에 대한 회수 조치 필요 	
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 반영 필요 ○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원장 임명 및 분원설립추진단의 개원준비단으로의 변경 필요 ○ 중입자 가속기 유치를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적극적 노력 필요 	
방사선 사고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자력 발전소 및 방사선 관련 시설의 방사선 사고(비상 및 일반운전 상황 포함)에 대한 인명구호 및 구조 대응체계 ○ 실제로 방사능재난이 아닌 소규모의 오염에 의해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환자 후송에서 환자 격리와 치료에 대해 적합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 ○ 소규모의 방사능 오염과 피폭사고 발생시 오염환자의 응급 상황대처(미국, 일본 등 OECD 국가와의 비교 자료) 	

5)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중저준위 임시저장고 내진설계	○ 중저준위 임시저장고가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	
원전 운영변경 허가 처리기한	○ 원전 운영변경허가의 법적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	
방사능을 함유한 원료물질 수입	○ 방사능을 함유한 원료물질의 권고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와 방사능오염 재활용고철에 대한 회수관리체계, 관리비용 및 감시기 설치의무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데 동 사항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시급한 사안으로써 관련법 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, 과기부 등과 협의해서 처리할 것	
원전의 내진 설계기준	○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이 대형병원 등의 기준보다 낮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이나 해명자료 배포여부	
고리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	○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	
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미비	○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관련 기술 기준의 조속한 완비 필요	
방사선안전 사고 및 규제감독	○ 방사능 오염 사고시 피부 오염도 측정과 피폭 정도를 측정하는 것의 주체 ○ 방사능 사고 발생시 사업주들의 사고 은폐 및 축소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의 존재 유무	

6)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원자력연구원 우라늄 분실건관련	○ 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분실건과 관련하여, 핵물질 관리에 관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바람	
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업무관련	○ 기관고유사업 평가 위원회 외부 3인(이사 1인), 내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또한 과제책임자도 내부 평가위원으로 포함되어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	

7) 한국원자력연구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핵물질관리	○ 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분실사고와 관련하여, 관리소홀을 지적함 ○ 물질용기 안전마크 부착, 쓰레기 집하장 관리 강화 등 기본적 안전조치 및 예방환경을 조성하고, 재발방지대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○ 우라늄 분실과 관련하여 규정간 분실 보고시점의 상이함을 보완 필요 ○ 관계기관간 핵물질관리 협조체계 강화 필요	
연구사업	○ 고준위폐기물처분 등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기, 제4세대원자력시스템으로 해결을 고려하는지 여부 ○ 원자력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개발 현황 자료 요구 ○ Gen IV 공론화를 통해 연구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며, 동 포럼의 활동목표 및 계획 등에 대한 자료요구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시설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자력연구원내 원자력시설 운영에 따른 비상 계획구역(800m) 재설정이 필요한지 여부 ○ 원자력연구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임시저장 고의 방사선감시측정기 설치, 주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 ○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08년 노후시설 보수 경비의 부족분 확보방안 마련 필요 ○ 원자력연구원 누리관 화재가 전기합선으로 보 이나 관리상 부주의나 안전불감증이 원인인지 여부 	

8)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특구추가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덕특구법안 발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원인 과 타지역 특구 확대 및 추가지정에 관한 입장 	
특구육성사업 예산/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0년까지 투입되기로 한 6,600여억원 예산 내역과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의 투자계획 ○ 특허자산실사 결과 이후 관련 특허의 기술이 전 건수 및 특허자산실사 성과의 향후 계획 (미활용 특허의 상용화 계획) ○ 연구성과사업화 사업 투입 144억원의 진행경 과 및 성과 ○ 특구연구개발사업 투입대비 성과(기업매출, 특허 출원 등)와 특구연구개발사업 추적관리 시스템 유무 ○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미흡 및 연구소기업 관련 활성화 방안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첨단기술기업 지정 운영 실적 저조 및 기술혁신(INNO-BIZ) 인증기업의 지원 혜택의 중복성 여부 ○타지역 성과확산 관련한 성과확산 방안 ○연구생산집적시설 건립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의 타당성과 타 센터 등 건립과의 차이점 ○특구 출범 후 사업화율 저조 	
특구관리 / 개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외국인 전용부지(5만평) 실시계획 변경과 일반 분양 전용 문제 ○전용단지 입주 기업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 연구원과 상관관계 ○대덕테크노밸리(DTV) 산업용지 평당 분양가와 법을 이용한 대전시의 땅장사 의혹 ○영유아보육센터 건립시 새집증후군 등 유해물질 문제에 대한 대책/방안 ○영유아보육센터 운영 시 여성과학자 등 주요 수요자의 의견 수용 여부 ○대덕특구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, 기준, 파악된 불만사항 등 방안 ○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본부의 대책 ○대덕 특구 1,2,3지구 등 명칭 변경 필요 ○대덕특구 개발계획 및 특구 관리, 인허가 업무 등 주체 ○분양받은 업체의 3년내 공장 가동 등 본격적인 기업활동 강제 조항 ○지역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지역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방안 	
특구육성사업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특구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공고 관련 CEO 모임의 문제제기 ○비즈니스 허브센터 관련 기업입주를 위한 노력, 혜택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클러스터 육성사업 관련 설명 ○ (유)DIT홀딩스 관련 이윤 분배 ○ 이노폴리스투자조합 관련 운영 방안 및 투자 자금 모집 방안 ○ 대학, 연구소의 BI센터와의 중복투자 방지 및 기업유치 대책 ○ 대덕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특구본부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구조 개선 방안 (특구본부의 독립성 필요) ○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제도 및 외국기업유치 방안 ○ 특구 출범 후 사업화율 저조(강화방안) 및 특구지원자금 운영 효율화 방안 	

9) 한국수력원자력(주) 고리원자력본부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원자력분야	<p><원자력안전 및 확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, 안전성에 만전을 기할 것 ○ 고리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필요 ○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○ 고리 1호기를 성능과 사양이 비슷한 타발전소와 비교했을 때, 유독 고리 1호기만 설계수명이 30년으로 된 경위 ○ 만약 고리 1호기의 실질 설계수명이 40년이라면, 지금이라도 최초인허가시 정해진 서류상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30년을 기술적 판단에 따라 40년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전 고장정지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? ○ 정비불완전, 제작불완전, 시공불완전 등으로 인한 고장정지가 22건이고, 오동작으로 인한 정지건수도 10건에 이르는 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 ○ 인적실수로 인한 고장정지도 8건인데, 실무담당자의 교육 필요 ○ 원전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 ○ 신월성원전 1,2호기와 관련된 읍천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 적절성 여부 ○ 읍천단층조사보고서와 관련해 지질연구원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 신월성원전 1,2호기의 내진설계기준이 적정한지 밝힐 것 ○ 국내 종합병원, 댐, 변전소, 수출용 표준형 원자로 등의 내진설계는 크게 강화된 것에 비해 국내 원전 내진설계 기준은 변경없음. 원전의 지진대비 안전성에 대한 의문 제시 ○ 고리 4호기 중저준위 임시저장고는 1990년 건축허가 취득시 내진설계 대상인지 여부 ○ 고준위폐기물저장 포화에 대한 준비 부족 ○ 방폐물관리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 ○ 원전사후처리충담금 전산화 과정에서 사용후 연료 재고량이 수작업회계 처리수량과 실제 재고간 차이가 발견되었다는데 철저한 관리를 위한 향후 대책 	
수력분야	<p><도암댐 문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암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	

2. 정보통신부소관

가. 정보통신부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정책홍보관리	<p><조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시, 현재 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의 이관 및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, 언제까지 괴리감 있는 업무들을 우정사업본부에 위임시켜 추진할 것인지? 최대한 빠른 시기에 통합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면 업무조정 등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 ○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○ 각종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<p><법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허위 경영평가 보고서에 대하여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책임부서로서 철저한 진상파악과 사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○ 정보사회진흥원 비정규직 임금을 포함할 경우 어떤 평가를 받는지 사후 보고하기 바람 ○ 산하기관장 연봉관련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은 1억3천만원, 관리기관인 연구진흥원은 1억8천만원인데,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사에 정부관계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? <p><홍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부처가 합동브리핑실로 이동하더라도 정통부는 장관의 소신으로 기자실을 오픈해서 취재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지?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미래정보전략	<p><기획총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자원 통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통합 전산센터 발전 로드맵 마련 필요 ○ 해킹 및 민간위탁 인력에 의한 정보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○ 통합전산센터 이전에 일부부처 이견이 있었는데 다른 부처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닌지? ○ 광주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를 지역 사회/경제와 어우러진 훌륭한 모델로 만들기 위해 지역인력 적극 활용 당부 ○ 이전 이후에도 개별부서에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용을 여전히 갖고 있는 등 센터 구축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바, 통합 전산센터로의 이관사항에 대한 효율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고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 <p><미래전략기획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홍보되고 있는 정보화관련지수는 정책과제의 설정을 잘못 인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새로운 정보화지수를 준비할 필요 <p><유비쿼터스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지식포털 사업은 '99 ~ '06년까지 3,479억 원이 투입된 대형사업이나 동 포털의 이용실적 및 편리성 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○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과 보안, 프라이버시 등 역기능에 대한 극복방안 마련 필요</p> <p>○ RFID/USN 시범사업은 각부처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사업이므로 범부처추진협의체를 만들어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</p> <p>○ 국방부와 정통부간의 국방정보화 협력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고, 2006년 국방부 연구개발 업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협력위원회 개편이 필요한 등 국방정보화 협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?</p> <p><인터넷정책></p> <p>○ 등록대행사가 수수료를 인하하여 정부의 수수료 인하효과가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</p> <p>○ 정통부의 정책에 산하기관이 솔선수범 하여야 하는데, 2단계 도메인의 경우 산하기관의 도입·운영이 저조하므로 적극 도입·운영</p> <p>○ 그리드 기술을 사용하는 인터넷업체에 의해 콘텐츠를 제공받는 이용자측의 PC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, 이용자의 약관동의를 명시화하는 방안이 필요함</p> <p><인프라정책></p> <p>○ u-City 기술의 경우 삶의 질 개선이 목적이거나 아직은 복잡한 기술로 인해 편리함 제공은 미흡함</p> <p>○ u-City 방향, 패턴, 표준모델 등의 적정한 제시를 통해 시행착오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해야 하며, 이를 위해 u-City지원센터 활성화가 필요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-Work 도입 확산이 매우 중요하며, 모든 직장, 기관들에게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다른 기관들에 모델을 제공하면 좋을 것임 ○ 새로운 산업 및 시장창출을 위해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은 시급한 현실이나, 이를 통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,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, 정부에서 망 고도화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 ○ u-City에 대한 표준화된 구축 모델과 기술 기준의 정립없이 지자체별로 u-City 사업을 추진할 경우, 도시간 상호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? 	
<p>통신전파 방송정책</p>	<p><통신방송정책총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판매 의무화 법안 관련 앞으로의 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제출바람 <p><통신경쟁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선전화, 초고속인터넷, 이동전화 등 주력 서비스들이 국내시장의 포화점에 접근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미래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부각되고 있는데 신서비스/신사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신서비스/신사업과는 별도로 기존 사업영역에 대한 혁신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필요 ○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통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, 현재 정보통신분야의 기술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에서 정부가 다 신고 받고 승인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음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판매 의무화 도입시 재판매의무를 부과받는 사업자의 투자유인이 저하되고 시장이 위축될 소지가 있음. 도매규제로 전환한 뒤 소매규제의 일몰제 도입 등 소매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○ 재판매는 이동통신시장 초기에 펼쳤어야 할 제도로서 지금 재판매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함 ○ 인터넷전화, 국제전화 등 이종망 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도 하고 새로운 투자도 촉진해야 함 ○ 공중전화의 수지적자가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? ○ 정부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주도할 8대 통신·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, 동 계획에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는지? <p><통신이용제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선인터넷 과금방식 변경으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, 이용자에게 문자 위주 서비스 이용방법 홍보 필요 ○ 이동전화 요금수준에 대한 분석과, 외국자료 인용이 아닌 정밀한 이동전화 요금 비교 필요 ○ 이동통신 요금제도와 관련 시장원리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? ○ 요금인하 관련 절차등에서 정통부의 요금인하 의지가 의심스러우며, 요금인가제의 폐지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?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이동통신사 망내할인 도입은 환영하나, 기본료와 월정액을 인상한 것은 순수한 요금인하라고 볼 수 없음. ○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인하에 대한 행정지도 유무여부를 밝히고, 행정지도는 근거를 남겨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○망내할인으로 인한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는 할인율을 재조정하겠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일정의 행정지도로 보여지는 바,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람. ○'02년 SKT의 망내 통화료 할인을 폐지한 후 최근 망내 할인서비스를 다시 허용하게 된 배경과 차이점은? ○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, 고령자 요금감면과 같이 감면대상의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 바람 ○정통부, 환경부, 제조업체, 이동통신사업자가 협력하여 폐휴대폰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○단말기 보조금 일몰 이후의 종합적인 대책유무 ○무선인터넷이 패킷과 종량제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는데? 정보이용료를 별도로 받는다면 통신요금은 다시 서킷 요금제로 바꾸는 것은 어떤지? ○전장관계서 USIM 잠금장치 해제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진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? ○SMS 호환테스트는 잘 안되고 있는데 통신사간 규격통일이 시급함 ○무선인터넷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 기능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, 정통부가 불필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요한 무선인터넷 용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SIM Lock 해제시 부가서비스(SMS, CID, 로밍 등)의 호환성을 담보할 수 없어 통신사들의 혼란이 예상됨 ○ 정부는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제 도입을 통해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, 번호이동제 도입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? ○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통신사업자들은 의무약정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지고 WCDMA에서 USIM Lock이 해제되면 의무약정 없이 보조금 지급은 없게 되는데 사업자들이 의무약정 없이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지? ○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치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동일한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? ○ 3G 휴대폰이 음란물 유통 및 신종 성매매산업에 이용될 소지가 있음. 이에 대한 정통부의 사전예방 조치를 검토해 주기 바람. ○ 휴대폰 무료통화권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<p><통신자원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칸막이식 기간통신역무를 3개역무로 통합하였지만, 각 역무에 대한 허가절차 등을 잘 모르고 있음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기간통신사업의 주식취득 인가 등 고시개정이 공정위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협의가 필요 ○통신재난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 ○감청건수,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 증가 이유 ○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게도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을 검토 ○하나로텔레콤 매각관련 외국 투기자본의 ‘떡튀 카지노’ 경연장으로 전락할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?내외국자본에 대한 투자의 형평성을 비중있게 고려하고 인수주체의 투기성향을 중요 검토 사항으로 삼아야 할 것임 ○SKT, KT가 허가조건대로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? 현실성있게 허가조건을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? <p><융합전략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정통부의 계획과 달리 WiBro 사업활성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 ○WiBro에 음성서비스 탑재를 적극 추진해야 함 ○IPTV가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도록 노력 ○WiBro의 IMT-2000 국제 기술표준 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와이브로를 국내 WCDMA(3G)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역무를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? <p><통신위원회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이동통신사가 다른 대리점에서 구입한 휴대폰 및 중고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이동전화 가개통은 소비자 기망 외에 AS기간 단축, 요금인하 억제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. 휴대폰 신규가입시 가개통 조희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○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점에서 각종 부가 서비스를 멋대로 끼워넣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? ○부가서비스 끼워넣기를 하면서 가입후 한 달 후에 해지하면 과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, 대부분 해지절차가 쉽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본인 원하지 않는 요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, 이에 대해 대책은? ○초고속인터넷 해지단계에서의 부당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정통부의 제재 및 개선안은 무엇인지? 	
정보통신정책	<p><정책총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할 필요 ○반도체, 휴대폰, LCD 등 하드웨어중심의 IT정책으로는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IT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○LCD TV 등의 수출성과와 IT839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IT산업의 수출성으로 홍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하는데? ○와이브로를 둘러싼 해외환경도 호락호락하지 않음. 따라서 정통부는 남은 임기동안 초기부터 추진해 온 IT839 정책의 실효성 있는 마무리와 차기 정부로의 원활한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기술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ITA 평가위원에 부적격 인사가 평가위원으로 다시 등록되었다가 동일한 사유로 재탈락되는 경우가 있고, 동 위원들이 과제를 수행 하는 등 평가 위원 관리·운영에 문제가 있음 ○ 대학의 R&D 참여 확대를 위해 정통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? ○ 정통부와 산자부에서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복이 아닌지? ○ IT산업의 공든답을 특히 괴물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특허분쟁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마련 필요 ○ 장애인을 위한 IT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○ ICU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입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○ ICU 설립 및 국가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하여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<p><산업기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제 와이브로 활성화계획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, 그간 와이브로 기대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홍보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? ○ 로봇특별법 제정이 정통부와 산자부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? ○ 와이브로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자리 잡기 위해 성능개선, 음영지역을 커버하는 기지국 등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, 대책은? ○ 와이브로는 세계 40여 국가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, 향후 5년간 세계 시장규모는 93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해외시장 진출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?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능형 로봇을 이용해본 사람들이 다시 찾지 않는다면 지능형로봇 상용화에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? ○ 중소기업의 한계 극복기술이 부족하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끌어내지 못했으며, 부품의 국산화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면 지능형로봇 정책은 총체적 실패가 아닌가? ○ 장애인 기술개발 사업에 2000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투자대비 상용화율이나 기술이전율이 매우 저조함.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? <p><지식정보산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통부에서 수행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전문대 관련 사업은 없음. IT인력 정책은 누가 책임지나 장관께서 교육부총리와 전체적인 인력수급 정책을 협의해야 할 것인데,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있나? ○ IT839 정책 목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7만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, 실제로는 7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 졌음.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? <p><중소기업지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용기술 개발지원 사업의 평가와 지원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, 즉 기술평가 과정에서 IITA가 배제됨에 따라 정확한 지원금액이 책정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? ○ IT산업의 주무부처로서 IT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IT산업이 성장단계에 접어들어 대기업화 된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, 반대로 성장을 위한 활력을 잃고 있다는 보는데? ○기술력 있는 IT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기술담보비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? ○참여정부 4년 동안 정통부가 IT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왔으며, 노력했는지? ○전파연구소는 "IT신제품 인증 활성화" 사업으로 "IT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", "IT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"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, 성격상 이것이 전파연구소에서 지원할 적절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? 	
정보통신협력	<p><협력기획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국내 IT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(회담 등 후속 조치, 현지 사업 운영시 애로사항 해소, 지원 시스템 구축, 자금지원 확대 등) 확대 필요 ○남북 IT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통일부에서 관계부처와 형식적으로 협의하는지에 대한 확인필요 ○개성공단 및 금강산 등 경협지역에 대한 통신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 ○S/W분야, 애니메이션 등 북한의 IT 인력과 남한의 기술·마케팅이 결합한 분야에서 협력 필요 ○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허가절차 완화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국제기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(ODA)가 OECD 평균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IT 분야 대외원조 확대 필요 ○ 개도국 보건과 IT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평화대학 설립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필요 	
전파방송	<p><전파방송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전파진흥원은 조속히 민간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함 <p><전파방송산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할 것 ○ VIP 경호와 관련한 무선통신 제한조치에 대해 대통령경호실법 또는 전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전파연구소의 2007년 232억원의 예산중 연구비는 15억 8천만원에 불과함. 이에 반해 각종 주요 사업비로 78억원을 소요하고 있는데 전파연구소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연구비 관련 예산 배정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하는 것 아닌지? ○ 올바른 전파이용 안내 및 우리나라 전파관리 홍보를 위한 한국의 전파관리 책자 발간 등 중앙전파관리소 본연의 기능과는 괴리감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같은 홍보사업이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지? ○ 전파관련 홍보활동은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닌가? <p><방송위성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OBS 경인방송을 허가안한 이유는?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인방송 허가 시 전파월경 및 혼신문제를 사 후 점검하는 방향으로 허가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○ 경인방송 안테나실측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통부가 부담하면서까지 실측을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. 차후 이와 같은 무선국 설치 허가 요청이 올 경우 정통부는 계속 예산을 들여서 실측검사를 할 것인가? ○ 정통부는 방송위에서 허가 추천된 사안에 대해 방송위와의 힘겨루기 영향인지, 특정 방송사 로 비 때문인지,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지연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○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시설(MATV)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(안) 보고할 것 ○ 공시청 허용에 있어 정통부가 KT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? ○ 케이블TV의 경우 전송선로로서 필수설비이지만, 위성방송에 공시청망은 보조설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 있음 ○ '04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의 경우 케이블망과 공시청망(MATV)이 하나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, 이럴 경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간의 주파수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? ○ 공시청망이 허용되면 위성방송 사업자가 유선망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방송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방송사업자의 역무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?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시청망을 반대하고 있는 케이블업계는 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의 부족을 불만으로서 토로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에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? ○ 공시청망 개정관련 발표는 전문협회의 최종 보고서도 안 나온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협의를 통한 해결이 아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닌가? ○ 공시청망 개방이외에 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확대 및 소비자 매체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? ○ 케이블TV규칙과 구내통신설비규칙이 따로 있는데 양자가 대용량화되어가고 있으므로 구내통신설비규칙을 개정해서 한번에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, 케이블 사업자도 통신설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○ 일반국민이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○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 유무 ○ 국가자원인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MMS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	
<p>정보보호 기획단</p>	<p><정보보호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백화점 등에서 결제를 위한 무선랜 이용시 개인정보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○ ‘허위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’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○ 정보보호전문가(SIS) 자격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이양 및 제도개선 등의 방안 마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보안서버 보급과 관련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○보안서버 보급 계획에 턱없이 못 미치는 발급 실태 ○GS 인증마크를 가진 스파이웨어 제거 제품에 대한 홍보 필요 <p><정보윤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옵트인제도 시행 이후에도 불법 스팸이 늘고 있어 옵트인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됨 ○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바, 과태료 부과 실효성 제고 필요 ○기간사업자, 광고주 등에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 등 제재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○포르노물, 성매매 등 인터넷상 불법정보 시정요구(접속차단 등) 미이행 업체에 대한 강력 제재 필요 ○주요 포털사이트에 음란한 내용, 잔혹한 폭력이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 필요 ○정통부의 친북사이트 삭제명령 등에 대해서 조 선중앙방송이 비판한 사항에 대하여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는데 통일부에 요청하여 항의할 필요성이 있음 ○경찰청이나 국정원에서 친북게시물 삭제명령 요청이 있었는데 정통부의 조치내용은 ? 친북 게시물 삭제명령 요청에 대하여 정통부가 시행령으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삭제명령을 고 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 않은지?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관위와 비교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적발건수가 매우 부족한 것은 정통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지? ○ 댓글의 역기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함께 논의하여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, 동시에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 ○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많은 내용이 이용자 보호이지만 불법 유해정보의 임의차단, 검열강화, 표현자유의 제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<p><개인정보보호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 횟수를 늘리고 과태료 수준을 형벌로 전환하는 등 제재수단 강화 필요 ○ 인터넷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점검/삭제체계 정비 필요 ○ 주민번호 노출삭제를 위해 중국정부 등에 대해 더욱 강력한 요구 필요 ○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경위 및 향후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○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약관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지? ○ 아이핀의 정통부 산하기관 도입 확대 및 이용률 제고 필요 ○ 휴대폰에 긴급버튼을 설치하여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○ '07. 3월 CCTV 실태조사 이후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결과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녀 위치확인 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(본인에게 즉시통보의무 위반)가 있으므로 관련사항에 대한 법 개선 등 필요 ○ 그동안 2년간 추진해온 사업이라고 보기에 i-PIN 도입실적이 너무 미미해 보이는 데, 이에 대한 대책은? ○ 명의도용문제는 주민등록법위반, 사문서 전자기록위반, 통비법 위반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의 명의도용방지노력이 미흡함. 이에 대한 대책 필요 <p><정보문화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촌 초고속정보통신망 미구축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'08년중 모든 농어촌가구에 초고속망 구축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 ○ 중고PC 보급사업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 ○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고령층 정보화 교육 예산 확대 필요 ○ 장애인 정보화사업시 민간 장애인단체의 참여 활성화 필요 ○ 중국과 같이 '피로도 시스템' 제도를 도입하면 청소년층의 게임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임 ○ 방송통신융합의 시대에는 IP-TV, 와이브로 등 새로운 개념의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임. 이에 따라,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도 융합시대를 대비한 차원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추진할 필요 ○ 고령화사회 대비 고령층의 정보화교육은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나, '08년 정보통신부의 고령층 정보화교육 예산은 19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임. 고령층 정보화교육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시스템 도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정부에서 ‘온라인 게임 강국’이라는 성장일변도의 논리로 너무 게임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, 이에 대한 의견은? ○ 현재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책 방향은 인터넷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향후 휴대폰 중독, 특히 청소년 휴대폰 중독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 	
SW	<p><소프트웨어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통부 SW분리발주현황을 확인해보니 6건밖에 되지 않는 바, SW분리발주 활성화가 필요하고 대기업의 참여하한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음 ○ Head Count(Man-Month) 방식의 인력관리 관행을 성과물 위주 관리로 개선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주자 주변에 작업장소를 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SW개발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○ SW사업 예산편성시 SW사업대가기준의 유지보수요율(10~15%)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 필요 ○ 패키지SW 유지보수요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방안 모색 필요 ○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친고죄를 삭제하는 것은 FTA 협상결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지?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람 ○ 다양한 SW분류체계의 보완과 통일이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○ 외국에 비해 국내의 SW 가격이 비싼 이유는? ○ 2006년 패키지SW 생산이 2002년에 비해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? ○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, 2004년을 기점으로 SW불법복제율이 줄어들다 올해는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(06년 17.1% ⇨ 07년 8월까지 27.0%) 이유가 무엇인지? ○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 설립을 위한 법개정 당시 추가예산요구는 없을 것이라 하고 그 신고 실적도 25건으로 극히 저조한데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할 가치가 있는지? 또한 신고업체당 게시물이 모두 15건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자료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?</p> <p><전략소프트웨어></p> <p>○ 방통융합시대를 맞이하여 정통부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, 적극적인 자세로 문광부와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닌지? ○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구축 이후 국제 연구개발센터 유치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 ○ 우리나라의 공개소프트웨어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,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OECD OS 가격 비교자료를 제출하기 바람</p> <p><소프트웨어기술혁신></p> <p>○ 소프트웨어산업의 R&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% 미만으로 저조한 바, 소프트웨어 업종에 정부가 과감히 R&D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 필요</p>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총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KT가 임대료 및 관리비 자체를 인상을 하지 않은 것이 특혜가 아닌지? ○정통부 출신 공무원이 개방직 공모직에 지원하여 임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? 그럴 경우 지원한 민간인 지원자는 들러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, 개방직공무원제도의 도입취지와는 상당히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? ○정통부 직원들의 골드번호 보유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은 통신사측의 정통부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됨 	

나. 우정사업본부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우정사업	<p><경영기획, 금융사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방통위 설립시 우정업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 ○사회환원 측면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사회공익적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 ○‘공무원 선택복지제도’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직원들이 단체보장보험이 아니더라도 보다 편리하게 치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<p><우편사업, 감사, 총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새주소 사용 활성화 및 새주소 우편번호 제공을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대책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름, 주소, 서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폐기 등기우편 배달증을 폐기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○ 우편요금 감액이나 수수료 조정시 우편요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거나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바,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○ 국제우편운송료 미지급액의 증가로 국가간 신뢰확보에 저해가 됨 ○ “우편물류시스템”인 “포스트넷”을 통하여 배달되지 않은 소포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○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 절취사건 등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방지 대책 	

다. 한국정보사회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정보화기획 및 정책	<p><정보화지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-사회 실현의 역기능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논의 및 연구 필요 ○ 성과가 좋은 부분을 중심으로 국가정보화지수 평가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나, 정확한 IT수준 평가를 위해서는 정보화 지수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 	
u-인프라구축	<p><연구개발망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망 제공용량의 대기평균이 5%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80% 이상으로 나타나고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있어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망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</p> <p><농어촌 초고속망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초 지자체별로 희망가구 조사시 누락이 발생하여 초고속망 구축율이 미비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사업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. <p><u-Health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-Health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복지부와의 협력 등 필요 <p><u-work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관 지방 분산에 따른 대안으로 u-Work 도입 의무화 등 지원 방안 강구 <p><초고속 인터넷 품질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초고속 인터넷 품질보증제도의 조속한 개선(최저보장속도, 장애에 따른 보상방법 등) 필요 ○ 초고속정보통신망 속도 과대 광고 대책 마련 <p><URC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RC 로봇이 가격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고, 가정용로봇이 단순히 기존 전자제품의 여러기능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있음. 	
u-서비스지원	<p><중소기업 정보화 사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ASP사업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대기업 등에게 부당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로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심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</p> <p><u-City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자 관점에서의 u-City 사업 추진 방안 필요 ○ 지자체간 u-City 구축과 관련하여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무분별한 확산이 우려되므로 표준화 등을 통하여 호환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○ u-City 사업 내에 보안·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<p><RFID/USN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FID/USN이 확산되면 여러 분야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.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 보호, 개인정보보호, 역기능 등 제도적/기술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	
전자정부	<p><전자정부지원/행정정보D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정부사업·행정정보DB사업의 경우 상위 IT서비스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어 전자정부 및 행정정보 DB구축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 ○ 사용자 중심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	
조직운영	<p><조직운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평가 오류에 발생 사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○ 기획처의 예산 지침을 편법 적용하여 가변 수당을 고정급 전환하여 지급하였고, 이를 받을 수 없는 보직자에게도 지급한 바 있음	

라. 정보통신연구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IT지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진흥원의 지재권보호센터는 우리 IT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분쟁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○ 2008년 IT핵심기술 해외유출방지 지원예산 2억원의 사용 용도 ○ Patent troll(특허 괴물)에 대한 방지 대책 필요 ○ 우리나라 3대 IT 수출품목인 휴대폰에 대한 특허는 바로 사업화될 수 있는 특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이 너무 저조하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. ○ 휴대폰에 대한 특허의 기술이전이 낮은 이유가 대기업 입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게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지 여부 ○ IT특허에 대해 정통부가 재판 전에 조정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 	
평가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량과제의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결과 61%가 성공으로 평가 되었는데, 이는 당초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○ 2005년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였다고는 하나, 여전히 평가절차 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를 2차로 변경하는 등 연구사업 평가제도의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 	
<p>융자사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6년 응용기술개발지원 융자사업에서 게임 산업에 지원한 과정을 보면 신청일부터 평가까지가 10일에 불과함. 일반 은행과 차별되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규칙을 따라주기 바람 	
<p>기금 자산운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 확충과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○ 소형기금을 관리하는 기관들과 기금의 리스크 관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바람 	
<p>인력양성사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T SoC 인력양성사업 등에 대해 기관별로 중복된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 ○ 디지털 케이블과 디지털 지상파 방송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방송기술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함이 필요 ○ 향후 IT인력의 수급전망에 대한 내용 ○ 우수 S/W인력의 대기업 편중 현상이 두드러짐. 다양한 인력정책에 따라 교육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인력양성을 산하기관이 수행하여 산하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음 ○ 외국전문기관과의 제휴, 중소기업 외국인 유치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양성프로그램 필요 ○ 해외교수초빙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강의계획 변경(33%) 및 지원 학생 부족에 따른 폐강(11%) 등에 대한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성된 고급인력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에 대한 DB 구축 필요 ○ IT인력 수급의 질적 불일치(Skill Mismatch)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IT학과 전공역량강화와 산업체 수요 지향적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 ○ 공학교육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 	
IT839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T부문의 기술무역수지 적자증가로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시급함 ○ 최근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구 분야 충돌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○ IT839전략이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데에 대한 견해 ○ IT분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 증가에 대한 대책 	
지역 IT특화 연구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초 마스터플랜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·집행한 사항 ○ 4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립한 마스터플랜이 사업추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낭비 여부 ○ 각 지역협의체별로 반드시 동일한 액수로 일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적음 ○ 예산의 배분측면에서 협의체별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을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	

마.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SW산업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부문에서 SW제값받기 등 중소SW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 ○ SW사업 예산을 기능점수방식으로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W사업 추진 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헤드카운트 방식이 적용되는 등 인력관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그 이유와 대책 ○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도, 발주자 주변에 작업장소를 정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, 개발센터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 ○ SW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패키지SW 분야 생산이 2002년 5조1천억원 규모에서 2006년 2조9천억원으로 줄어들었음. 그 이유와 대책 ○ 민간업체가 좀 더 과감한 R&D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, 그 방안에 대한 답변 바람 ○ 정부가 WIPI담채를 의무화하여 국내 업체들이 특히 협상에서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. 	
공개SW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3년 이후 추진된 공개SW 활성화 사업의 성과로 서버 OS만 강조하는데, 데스크탑 OS부분은 포기한 것인지? ○ 행자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('07.9) 이후 성과 유무 ○ 데스크탑 OS에서 리눅스 점유율은 1%에 불과하고, 교육기관의 경우 윈도우 위주의 사용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에 대한 대책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개SW 응용프로그램 및 데스크탑 이용율을 높이는 노력과 리눅스의 호환성 및 활용성을 높여 중소기업 등에서 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 ○ 향후 계획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분야별,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○ 공개SW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 개설 필요 	
수출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정부 관련 사업 추진시 정보사회진흥원과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	
온라인SW 시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라인SW시범사업 추진시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몇군데 안되었음. 어디였으며, 특혜는 아닌가? ○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 특정기술인 ActiveX를 활용한 것은 위험부담도 있고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 것임. 추후 ActiveX를 없애기 위한 추가비용 발생여부 ○ 온라인 SW서비스와 SaaS의 차이점 	
임베디드SW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T839 정책 중 임베디드SW분야 실적이 가장 부진함.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. ○ 국내 임베디드SW 산업은 워낙 영세할 뿐 아니라 HW 개발 기업이 함께 개발하는 경우도 많아 표준화된 자료조차 찾기가 쉽지 않음 ○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나서 중소기업과의 협업 시스템을 만드는 등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베디드SW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교육 문제도 정부가 나서야 할 부문임. 그러나 현재 임베디드SW 개발자들은 기업이나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부주도의 체계적인 중급 개발자 양성이 시급함. ESSS(Embedded Software Skill-set Standards) 마련을 통한 인력양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DC경쟁력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,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“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”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거래인증제도” 정착을 위해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. 그러나, 관련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래인증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○ “거래인증제도”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온디콘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거래인증 시행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○ 디지털콘텐츠 산업규모가 정체상태인 이유와 대책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SW전문인력 양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SW산업의 인력 부족 및 처우개선 방안 지적 ○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취업률 ○ SW인력의 수요자·공급자 간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○ SW분야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을 해당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를 중심으로 추진해주기 바람.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Mobicon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이모비콘 2007에 대한 자체평가 의견 ○ 해외 참석자 비율이 너무 낮는데 국제행사로서의 목적 달성여부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케팅 활동도 부족했고, 강사료도 지출하지 않는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무책임한 판단임 ○ 휴가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통보해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임 ○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비즈니스 기회 제공 방안 	
<p>누리꿈스퀘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첨단IT복플렉스는 정부가 임대업을 영위하는가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갖고 출발했던 사업임. 내년 이후 정부예산의 추가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지? 지방이전기관이 입주하는 경우는 없는지? ○ 누리꿈스퀘어의 입주계약율이 31.1%로 저조한 이유 ○ 입주예정 정부기관(3개)은 기관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입주하는 것인가? ○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여건 마련 현황 ○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특별 대책 현황 ○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동 사업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의 유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으나 현재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고 있지 못함. 	
<p>기관운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평가 하위권 성적 이유 ○ 인사규정 개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 이사회 처리횟수가 많음 	

바. 한국정보보호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<p>불법스팸 대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스팸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부과율이 저조함. 과태료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이유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마련 할 것 ○옵트인 제도도입,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나, 스팸근절이 되고 있지 않은 바,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○과태료 부과시 실제과약이 안되어 징수가 안 되는 것과 행정처분의 한계 때문에 징수가 안 되는 비율을 구분하여 별도 보고 ○스팸전송자의 신원과약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스팸 전송에 일조하고 신원이 확인된 기간통신사업자, 광고주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○대기업 통신사들이 스팸머를 계약해지 않고 수백차례에 걸쳐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행위가 아닌지 여부와 이에 대한 관리 책임 지적 ○스팸머와 재계약한 기간통신사 및 광고주에 대한 조치내역을 별도 보고할 것 	
<p>개인정보보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기술적 안전성 부족과 수요자 특성과약 없이 추진하여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(<i>i</i>-PIN) 보급이 부진함. 기술적 불안 및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여 <i>i</i>-PIN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 활성화에 노력해 주기 바람. ○사망자 명의도용시 제도적 장치와 <i>i</i>-PIN 발급시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키보드 및 USB 해킹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터넷상 i-PIN 법제화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, 산업자원부가 반대하고 있는데, 이러한 부처간 충돌을 조율할 방안을 마련할 것 ○ i-PIN 업무를 주민번호 관리 등을 맡고 있는 행자부 업무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○ 개인정보 피해신고 증가,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 훼손 침해 및 도용이 증가함. 주민번호 노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삭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 ○ CCTV 실태조사 이후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안 하고 방치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음. 시정권고의 이행 결과에 대해 추후 보고해 주기 바람. ○ 구글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의 경우 전세계 주요도시 건물까지 관찰이 가능함. 국가기밀 유출 및 정보 침해 문제에 있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의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 ○ '06년도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제출하고, '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웹사이트 임의가입에 대한 손해배상'건에 대해 설명할 것 	
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. 인터넷은 항상 누구나 접속 가능하므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바람 	
암호이용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산암호 SEED가 미국, 일본의 암호와 함께 세계 표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둠 ○ SEED가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	
정보보호제품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수평가기관 도입 등으로 평가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,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현재 평가팀 구성 현황을 보면 '08년에도 평가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. '08년 하반기에는 평가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	
바이오인식 정보시험센터 (K-NBTC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6년도 K-NBTC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후 방치한 사안에 대해 경과보고 ○ 예산집행시 시설공사 및 장비장착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 	
정보통신기반 시설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을 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	

사. 한국정보문화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정보격차해소 환경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고PC 보급사업 예산 삭감의 부적절 ○ 장애인 정보화사업의 추진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중심적 정책을 펴야 함. ○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전자금융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필요 ○ 정보통신보조기기 선정시 수혜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선정절차를 개선할 필요 ○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필요 ○ 중고PC보급시 기증된 PC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○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보급의 확대 필요 ○ 시장의 수요와 기술개발이 연계되지 않아 장애인 보조기기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함. 	
국민정보화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증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의 예산 증액 등 사업 확대가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령층 인터넷 이용을 제고가 필요하며, 고령층 정보화예산 축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 ○ 종료된 저소득청소년 정보화교육의 제도적 검토 필요 ○ 장노년층 내에서의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변화를 검토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보화 역기능예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사용제한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 ○ 단순 교원 직무 연수자가 아닌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등의 전문상담 인력 강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○ 사이버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고, ‘재발’ 방지보다 ‘예방’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이 필요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제정보 격차해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축 후 4년 마다 시행하는 개도국 정보접근센터의 유지보수 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○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의 실무급 과정의 교육비용이 1인당 700만원, 고위급 과정의 교육비용이 1인당 1,250만원으로 과다함. ○ KOICA와의 협조 하에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사업을 지속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필요 ○ KADO와 KIICA의 국가간정보화지원사업 업무 중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○ IT분야 ODA확대를 위해 노력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식정보 자원관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번 구축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DB와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한 DB로 구분하여 활용방안을 내실화 방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음. ○ 국가지식포털의 성과 평가기준은 일장리 창출이나, DB구축량이 아니라 DB활용도가 되어야 할 것인바,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증액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 	

아. 한국인터넷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모바일주소 (WINC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WINC서비스 중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 ○ WINC에 대한 홍보를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민들이 공용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 필요 ○ KTF와 LGT도 WINC검색사이트를 조속히 구축해야하고, 구축시 검색사이트명은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데, 이에 대한 대책 필요 	
분쟁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	

자. 한국전파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인력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파가 매우 중요하므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이 전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○ IT교수강화사업의 강사가 외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우수강사 발굴 필요 ○ 전파진흥원이 IT인재개발교육원을 인수한 사유 및 정부가 교육원을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 	
조직경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보통신망 이용료를 평일근무시간에 접속된 직원에 대해 지급한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	
정책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사의 방송주파수 MMS화 등 현안에 대해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국전파진흥원도 정확하게 입장 마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파진흥원이 통방정책업무를 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○ 정책연구과제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정통부 지정 과제만을 수행하는데 전파진흥원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장기적으로 대책 마련 ○ 전파진흥원의 국가경쟁력 제고 역할은 무엇이며, 향후 정책연구 개발 계획 등 전반적인 발전 방안 검토 	
모바일필드 테스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미에 개소한 모바일필드테스트는 중앙에서 도와주면 빠른 시간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람 	

차.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유관기관간 업무연계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연계 추진 ○ KIICA설립 이후 KOTRA, SBC 등과의 차별화 방안 ○ KADO와 업무 성격 차별화를 분명히 해주기 바람. 	
해외IT지원 센터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해외IT지원센터 폐쇄와 신규 거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보고와 '08년 예산안에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○ 해외IT지원센터의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 활동 필요 	
해외진출 지원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T중소 벤처기업들에 대한 시장정보 제공및 해외유통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 필요 ○ 단편적인 수출지원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의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 강화요망 ○ ITbizKorea.org와 ITX, DynamicITkorea 웹사이트의 차이점 	

3. 기상청소관

가. 기상청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정책홍보 관리분야	<p><정책 관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분별한 기상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예보 정확도 향상에 대한 역량 결집이 필요함 ○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이 기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<p><인사 관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보업무는 기상청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므로 기피업무로 인식되어서는 안됨. 예보분야에서만이라도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처우개선을 통해 예보업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전문가 양성 필요 <p><조직 관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상선진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한 인력 재배치가 아닌 조직혁신이 필요 ○ 대구기상대 이전·승격 추진이 미진한데 현황과 대책 ○ 보령기상관측소 기상대 격상 진전 및 지대한 관심과 노력 필요 <p><국제협력 관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북기상협력이 중요하므로 남북간 의제에 기상협력문제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노력 당부 ○ 한반도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남북기상협력 활성화 대책 마련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극적인 북한에 대한 남북기상협력 유도방안 ○ WMO 국가분담금 미납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 <p><홍보 관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터넷기상방송을 통하여 기상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기상산업 활성화 정책과 배치됨 ○ 기상정보는 대중적인 과학 콘텐츠이므로,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과학TV에 기상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	
<p>정보화 분야</p>	<p><슈퍼컴퓨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슈퍼컴퓨터 자체의 규모 및 성능은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이 부족하므로, 전문인력의 발굴 및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○ 슈퍼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슈퍼컴 도입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동시에 함으로써 효율성 제고하고, 도입 과정에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. ○ 슈퍼컴 장애는 예보의 부정확도와 직결되므로 슈퍼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	
<p>예보 분야</p>	<p><예보정확도 등 예보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예보 정확도를 비롯한 예보 및 특보정확도 향상 방안 ○ 슈퍼컴 2호기 도입이후 예보정확도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 ○ 기상청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특보정확도에 미발표 특보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통계 방식임.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0년 예정된 안개특보의 가능성 및 안개특보를 단계별, 지역별로 정확하게 하는 등 사업계획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○ 직원 1288명 중 기상예보기술사가 9명에 불과, 기술사가 너무 부족함.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사 양성을 위한 대책 필요 ○ 2007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상예보 서비스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으며, 2007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의 권역별 종합만족지수 비교에서 서울과 강원권역이 제일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 <p><기상재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국에서는 폭염이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, 우리는 폭염이 자연재해 대책법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, 폭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○ 낙뢰, 홍수 등 악기상시 서울·경기지역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가 필요 <p><수치예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수치예보모델 운영능력의 향상이 필요함 ○ 2007년 6월부터 한국형 모델의 현업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현재 상황 및 투자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, 당초 연구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○ 한국형 지형과 풍토에 맞는 수치예보 모델 개선 대책 ○ 연구용 모델(KWAF)의 향후 적용방향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디지털예보서비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예보정확도에 비해 디지털예보의 정확도가 낮아 시험운영기간을 연장한데 대한 견해 ○ 수치예보정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예보서비스는 성급하게 추진한 사업 ○ 수치예보모델정확도가 뛰어난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디지털예보를 시행한 것은 전시행정으로 생각됨 ○ 디지털예보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수치예보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예보정확도 향상이 필요 	
관측분야	<p><관측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상관측망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 작업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. ○ 기상관측장비의 장애율 감소 및 활용성 제고 방안 ○ 기상관측장비의 적절한 유지보수예산 확보 ○ 제2서해종합해양기지 신설 및 해양관측선 건조에 대한 이유 ○ 외자장비도입시 기술지원과 유지보수의 원활함을 위해 ‘최저가 낙찰’방식이 아니라 ‘협상에 의한 계약’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 <p><기상장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후장비교체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○ 위성수신장비 고장시 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리기간이 짧아지도록 향후 계약시 개선할 것 ○ 윈드프로파일러, 라디오존데 장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p><부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해부이 고장시 수리기간이 3개월씩이나 걸리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○ 현재 설치된 5개 지점의 부이 중 동해 부이만 자료 수집률이 낮고 장애가 잦은 이유 및 대책 ○ 해양기상부이 유지보수는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이 보수작업에 투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○ 해양기상부이 유지보수 용역비를 현실적으로 장비가격의 20~30%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○ 해양기상관측부이 설치계획과 설치지역 ○ 제주도 남해쪽에 부이 설치 방안 검토 	
기후관련	<p><기후변화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 기후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대책 ○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자료 확보 여부 ○ 이상기후 예측과 변화하는 기후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○ APCC 국제기구화 추진을 위해 13억~15억 예산이 필요함에도 작년 10억, 올해 9억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음. 아태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함 	
기상산업	<p><기상산업육성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활지수 용어의 명칭과 단계문제를 개선하고 민간기상사업체에도 기상청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표준화하고, 국민들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기상지수들을 발표하도록 노력할 것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활기상을 제대로 예측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. 방송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생활 기상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 있음 ○ 기상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상청의 방안 ○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에 지속적 관심과 충분한 설명 필요 ○ 기상산업진흥원에 기상측기검정 위탁 후 개선된 사항 <p><콜센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상 콜센터의 적정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	
기상교육	<p><기상교육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보관 교육 이수과정에서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실무와 이론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할 것 ○ 지방기상청의 교육인원간에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 기존인력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는게 필요하며 정확한 평가와 전문적인 교과편성 및 수준별 전담교육이 필요 ○ 예보관 교육과정의 중복과목 해소 필요하며 악기상예보에 관한 과목은 없음.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분리하여 교육 실시 필요 	

나. 국립기상연구소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기상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논문은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현업에 활용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할 것 ○ 용역과제 선정시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 필요 	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진국과 같이 포괄적인 기상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기상청의 역할 강조 ○ 선진기상선도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이 5억이 삭감되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주시기 바람 	

다. 항공기상관리본부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항공기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기상정보 제공수수료가 정보생산을 위한 비용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. ○ 항공기상관리본부 임대료 체납을 해결할 것 	

라. 광주지방기상청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행정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객만족도가 최하위로 기록된 이유 	
예보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주지방기상청이 기상예보서비스 만족도 점수가 59.3점으로 가장 낮은 이유 ○ 7~8월 호우특보가 지나치게 자주 발령된 이유 	

마. 강원지방기상청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행정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·학 협동차원에서 강릉대가 수행중인 악기상센터 관련 용역에 충분한 협조 부탁 	
관측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원청 신청사 신축시 노후장비 교체 계획 	

바. 제주지방기상청

사 항 별	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	비 고
예보분야	○ 제주 집중호우(2007. 9. 4.~ 9. 5.)시 실시간 예보자료	
지진분야	○ 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훈련에서 드러난 통보체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철저한 대책 마련	

Ⅲ.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

1. 과학기술부소관

(1) 과학기술부

- 과기부 소관 법정위원회 가운데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다른 심의기관에 그 역할을 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과기부 산하 출연기관의 학력검증시스템 구축현황을 파악할 것
- 프론티어사업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장 공개채용 방안과 사업단 법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
- 프론티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우주발사체 개발일정 지연, 우주센터건설사업의 잦은 사업비 변경 등 우주사업의 사업변경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 차원에서 우주개발종합진흥계획을 재검토할 것
- 연구과제실명제 실시가 미흡하므로 개선할 것
- 과학기술부 직원의 경력관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산하 기관과의 순환근무가 필요함
- 출연(연)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하여 복지카드 및 노조지원금 등 지원방안의 실태를 파악하여 법제도에 적합하게 실시할 것
- 교육사업의 비중이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이 필요한 부분은 이관하는 등 사업을 일부 조정할 것

- 법체계에 맞는 ICU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
- 2016년경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현황 및 관련 연구개발 실태를 점검하여,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관리해 나갈 방안을 강구할 것
- 대전은 전국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1/4을 임시 보관하고 있으나 경주에 비해 지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직·간접 보상책을 검토할 것
- '88년 이후 건설된 고리 4호기 중·저준위 임시저장고는 내진설계가 반영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전에 지어진 임시저장고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
- 한전전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 (10Km) 내의 주민 87%가 방사선 비상계획시 소개에 대한 사전 교육 훈련 경험이 없고 88.7%가 대피장소를 모르는 실정임. 따라서 비상시 주민 교육 대책을 마련할 것
- 원자력(연)내 폐기물관리가 아직도 허술하고 지정폐기물 담당자도 핵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등 여전히 완전한 재발방지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할 것
- 과기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6대 중점과제를 추진중에 있는데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능한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
- 우라늄 분실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재구성 및 분실 우라늄의 정확한 경로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원자력(연)은 사건 발생후 4시

- 간이내 보고토록 되어 있고 과기부 고시에는 사후 곧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규정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을 강구할 것
- 과학영재 발굴육성 계획의 교육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및 과도한 사교육 조장우려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
 - 공제회 지원사업에 국방과학연구원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
 - 사이언스TV의 시청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 - 전체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·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
 - 향후 EU-FP 사업에 대한 참여계획 및 연구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
 - 해외우수연구센터 유치에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
 -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육성과 투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
 - 출연기관의 인건비지원의 안정성 및 고유과제 지원 등 PBS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
 - 출연(연) 자체수익의 축소편성 문제를 검토하고, 자체수익금이 규정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
 -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상의 8개 정량적 목표치에 대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 -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

- 출연(연) 보유 미활용 특허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
-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설정 및 성과검증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
- SCI논문의 질적 지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
- 국가 R&D 성과물의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과기부 차원의 법적 강제적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
- 대덕특구내 기업이 외국과 기술인도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,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
- 대덕특구가 성공모델이 될 때까지 대덕특구 육성을 위해 올인하겠다는 정부방침 끝까지 지킬 것
- 출연연 기관평가시 MOU 체결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논문·특허·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 확인할 것
- 지방국감 향응 보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해명 실시할 것

(2) 기초기술연구회

- 우수한 인력을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도록 할 것
-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사업의 연구책임자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
(3) 한국과학기술연구원

- PCT 특허는 43건인데, 삼극특허는 3건에 불과함.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
- KIST의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
- KIST 위상에 걸맞은 학술성과 목표 설정이 필요함. 우수 논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노후연구동 재건축 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
- 연구인력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
- KIST 청원경찰의 아웃소싱 문제와 방호임무를 수행하는 직군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
- KIST 유럽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역량강화계획 및 방안, 제2연구동을 활용하여 국내 연구주체의 EU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할 것
- 황숙주 상임감사(감사원 출신)는 1년간(2006. 9. 4 ~ 2007. 9. 9) 연간 650만원의 업무추진비 중 절반이 넘는 331만 5800원을 각종 경조사비로 지출했고 그 중 상당부분을 본인이 근무하였던 감사원(감사원 특별조사국장, 감사원 행정안보국장, 감사교육원 연구위원)직원의 각종 경조사비 등 사적용도로 집행하였음. 부적정하게 집행된 판공비를 시정·회수조치 할 것.

(4) 국가핵융합연구소

- 타 출연(연)에 비해 안정적 연구비의 비중이 크게 낮은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
- 중요 국가시설로서 보안등급 지정 및 방문출입자관리를 강화할 것
- ITER국제공동개발사업의 국내전담기구 지정, 중요 보안대상 기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독립법인화 계획을 검토 할 것
- KSTAR 추가 부대장치 개발 계획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 할 것

(5) 한국천문연구원

- 북한이 이동식 SLR 시스템을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다는 데, 천문(연)에서는 인공위성의 궤도정보 확보를 위해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
- 천문(연)의 경쟁력을 위해 대형 망원경 확보가 핵심인데, 6.5m 대형망원경 사업 무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

(6) 한국생명공학연구원

- 당초 무기계약 전환계획 대비 최종전환 인력이 미흡한 편인데,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인력의 근로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
- 감염성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법규정상 감염성폐기물은 15일이내, 지정폐기물은 45일이내 처리되어야 하나,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폐기물 발생일자가 불분명하여 기한내 처리여부 확인이 어려움.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

- 최근 실험동물이 실험보다 실험외(사고사, 자연사 등)의 경우로 소진되는 비율이 높음. '08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연구자
원 관리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

(7) 한국한의학연구원

- 중국은 중의학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노력을 범국가적으로 경주하
고 있음.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할 것
- 한의학연구원은 200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
야 하는 대상기관에 포함되나, 현재까지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
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

(8) 산업기술연구회

- 3개 연구회 운영체제가 비효율적이므로 통합을 고려하는 등 효율
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
- 정부출연(연)이 자체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매년 자체수입
초과액이 증가하고 있으며,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이를 능률성과
급으로 과다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연구기관 직원은 사기진작을 추
진하고 있으나, 기관장들 처우개선은 안되고 있는 바, 연구기관장
의 연봉수준을 개선하는 등 노력할 것

(9) 한국생산기술연구원

-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센터가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역기업 및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설치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른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
-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인력을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직원들의 차별시정 방안 등을 강구할 것
-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시행령)에 따르면 공개경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비율이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
- 과다지급된 기관장 보수(감사원 감사결과)를 환수할 것

(10) 한국전자통신연구원

- 미활용되는 특허수의 증가는 연구성과가 사업화,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휴면특허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
- IT융합부품연구소가 2007년 및 2008년 상반기에 연구사업의 상당부분이 종료되는데 2007년 9월말 현재 신규사업이 전무한 상태임. 이는 IT융합부품연구소 직원의 인건비 미확보로 소속직원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. 이에 대한 신규과제 확보방안 등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
- 장애우 관련 기술개발에 1,957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은 23개에 불과하고, 기술이전실적도 저조함. 장애우가 개발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 노력이 필요할 것

- 장애우 의무고용비율(2%)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

(11) 한국식품연구원

-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안전하게 처리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

(12) 공공기술연구회

- 정부출연(연)이 자체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매년 자체수입 초과액이 증가하고 있으며,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이를 능률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출연(연) 원장 연봉 인상 적극추진 필요
- 출연(연)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강화가 필요함.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화(재교육 등) 제고 등 개선책을 마련·시행할 것
- <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> 실적이 국·공립연구기관 41%에 비해 저조함. 전 출연연 기관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여성들에게 폭넓은 취업정보 접촉기회를 제공하고, 여성 채용실적 우수사례 포상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

(13)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
- 위탁연구과제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과학기술분야의 정보보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를 맡고 있는 KISTI에서는 관련 부처 및 연구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및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
- 슈퍼컴퓨터 관련 응용 연구의 미약한 지원 및 슈퍼컴퓨팅 관련 활용 교육의 열악함 등의 이유로 동 분야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. 차세대 핵심 분야로 슈퍼컴퓨팅 분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
- 특허출원·등록비용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나 이에 비해 사업화 등 특허활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.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, 휴면특허의 유지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휴면율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
- 초과수입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편성 필요

(14) 한국건설기술연구원

- 휴면특허 최소화 및 특허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

(15)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- 특허출원의 사전심사 강화, 휴면특허 정리 등 전반적인 특허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
- 정부 여성과학자채용목표 권고안에 따라 여성과학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것
- 기관의 성과지표로 사용되는 특허등록현황이 기관자체적, 과기부 차원, KISTEP시스템으로 관리통계가 모두 다른 등 특허성과 부실관리가 심각한 실정임. 기관들은 체계적인 특허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할 것

(16) 한국지질자원연구원

- 현재 광물자원 포털사이트를 운용 중에 있는데, 지하공간의 전선(Cable)관리, 토양오염/토양이용도 까지 포함해서 지하공간 이용 및 관리/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총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할 것
-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것
- 남북한 광물자원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

(17) 한국항공우주연구원

- 연구개발사업(위성, 발사체, 우주센터)의 기간 및 사업예산의 잦은 변경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.
- 우주발사체의 개발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2008년 성공적 발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

- 특허 활용률 증대를 위한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할 것
- 외부인에 대한 연구원 출입증 발급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
- 연구원 홈페이지 콘텐츠의 갱신 및 관리방안을 개선할 것

(18)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
- OECD의 제4세대 R&D는 과학이 특허-산업화-비즈니스의 절차를 따르는 대신 과학환경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임. KISTEP은 OECD의 제4세대 R&D 이슈를 발굴하고 이것을 향후의 업무 내용에 포함 시키도록 할 것
- 사이버신고센터와 관련하여, R&D연구기획 및 연구수행절차상 발생하는 민원을 취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
(19) 한국과학문화재단

- 과학기자 해외연수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
- 과학방송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스카이라이프 외의 시청수단 확보가 필요함. 공익성 채널 선정을 통해 케이블 SO에 진입하도록 추진 필요
- 과학문화도시 사업의 실효성 조사 및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것
- 사이언스TV와 기상방송의 공동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사이언스TV 콘텐츠의 학교교육 연계 등 다매체 활용사업을 추진할 것

(20) 한국과학재단

-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의 이공계진학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
-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의 선진국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단과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
-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의 과학기술계 인사선정비율을 확대할 것

(21) 한국원자력의학원

- 감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회수조치 할 것
-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을 반영할 것
- 중입자 가속기 유치를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

(22)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
- 방사능을 함유한 원료물질의 권고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와 방사능오염 재활용고철에 대한 회수관리체계, 관리비용 및 감시기 설치의무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바, 동 사항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시급한 사안으로써 관련법 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, 과기부 등과 협의해서 처리할 것

-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관련 기술기준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비할 것

(23)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

- 기관고유사업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운영할 것

(24) 한국원자력연구원

- 향후 우라늄 분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
- 우리나라의 고준위폐기물처분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 및 제4세대원자력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
(25)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

- 특구 출범 후 특허출원 중 기술사업화 건수를 비교한 결과 사업화율이 저조함. 출연(연) 기술이전 및 성과확산 조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업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설립이 5개에 불과하여 실적이 저조함. 연구소기업과 기술이전의 조화를 통해 설립절차의 간소화 및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
- 현재까지 첨단기술기업 설립이 22개에 불과하며, 특구 내 세제혜택도 일부 기업에 그치고 있음. 첨단기술기업지정제도의 다각적

인 홍보 시행 및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및 보완을 추진하도록 할 것

- 해외 선진R&D센터 유치실적이 부진함. 특구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해외 R&D센터 유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
-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사업이 세제혜택을 노린 국내 기업의 편법 운영으로 내실이 없음. 특구의 글로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외투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할 것
- 특구내 출연연구기관과 타 지역과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기술이전 활동 강화 등을 통한 출연(연) 연구성과를 타 지역과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

(26) 한국수력원자력(주) 고리원자력본부

-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과의 관계를 원만히 할 것

2. 정보통신부소관

(1) 정보통신부

- 정보통신부의 업역을 분석하여 업무시스템을 방송통신융합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
- 정보사회진흥원 허위경영평가보고에 대한 책임부서로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
- 자국에 유리한 정보화지수가 아닌 실질적인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새로운 정보화지수를 개발할 것
- 정보자원 통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것
- 해킹 및 민간위탁 인력에 의한 정보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
- 국가지식포털 사업은 '99 ~ '06년까지 3,479억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으로 동 포털의 이용실적 및 편리성 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
- 정통부의 계획과 달리 WiBro 사업활성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
- 무선인터넷의 과금방식 변경으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, 이용자에게 문자위주 서비스 이용방법을 홍보할 것
- 기간통신사업의 주식취득 인가 등 고시개정이 공정위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협의를 진행할 것
- 통신재난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

- IITA 평가위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재차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거나 과제를 수행 하는 등 평가 위원 관리·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
- 국내 IT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(회담 등 후속조치, 현지 사업 운영시 애로사항 해소, 지원 시스템 구축, 자금지원 확대 등) 확대 필요
- VIP 경호와 관련한 무선통신 제한조치에 대해 대통령경호실법 또는 전과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관간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
- SMATV 정책추진에 있어 케이블TV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할 것
- 백화점 등에서 결제를 위한 무선랜 이용시 개인정보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‘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’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정보보호전문가(SIS) 자격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이양 및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
-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율 향상대책을 마련할 것
- 기간통신사업자, 광고주 등에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 등 제재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
- 포르노물, 성매매 등 인터넷상 불법정보 시정요구(접속차단 등) 미이행 업체에 대한 강력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

- 주요 포털사이트에 음란한 내용, 잔혹한 폭력이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
- 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 횟수를 늘리고 과태료 상향조정 등 제재수단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
- 인터넷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점검/삭제체계를 정비할 것
- 주민번호 노출삭제를 위해 중국정부 등에 대해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
- 초고속통신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강화, 초고속사업자 개인정보유출 사건 경위 및 향후계획을 보고할 것
- 아이핀의 정통부 산하기관 도입 확대 및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
- 휴대폰에 긴급버튼을 설치하여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
- 자녀 위치확인 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(본인에게 즉시통보의무 위반)가 있으므로 관련사항에 대한 법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
- 농어촌 초고속정보통신망 미구축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'08년중 모든 농어촌가구에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예산증액을 검토할 것
-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고령층 정보화 교육 예산을 확대할 것
- 장애인 정보화사업시 민간 장애인단체의 참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

- 중국과 같이 ‘피로도 시스템’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층의 게임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
- 정통부 SW분리발주현황을 확인해보니 6건밖에 되지않은 상태이므로 SW분리발주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
- Head Count(Man-Month) 방식의 인력관리 관행을 성과물 위주 관리로 개선할 것(발주자 주변에 작업장소를 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SW개발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)
- SW사업 예산편성시 SW사업대가기준의 유지보수요율(10~15%)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
- 패키지SW 유지보수요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계의견수렴 등을 통해 모범사례 전파 등을 추진할 것
- RFID/USN 시범사업 추진시 타 부처의 협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범부처추진협의체를 만들어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
-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같은 중요정책 추진시 행정지도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근거를 남기고 자의적인 행정지도를 지양할 것
-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 전환할 경우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
- 폐휴대폰 처리와 관련된 제조업자, 이통사,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
- 디지털전환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, 방송의 수신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
- 경인방송 허가 시 전파월경 및 혼신문제를 사후 점검하는 방향으로 허가를 추진할 것
- 공중전화 수지악화 문제를 해결할 것

- 등록대행사의 수수료 인하효과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개선할 것
- 하나로텔레콤 매각관련 외국 투기자본의 ‘먹튀 카지노’ 경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외국자본에 대한 투자의 형평성을 비중있게 고려하고 인수주체의 투기성향을 중요 검토사항으로 삼아야 할 것
- ICU 설립 및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

(2) 우정사업본부

- 새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대책을 강구할 것
- 감액우편제도 변경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우편제도 변경 시 이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등기우편물 배달증은 보존기간(1년) 동안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하나 폐기되지 않고 있으며, 우체국에 보관 중인 2004년, 2005년 생성된 배달증에 대해 심의를 거쳐 폐기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 절취사건 등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
- 예산과 운용자금의 규모,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회 공익적 차원의 지원 확대 및 소외여성에 대한 배려를 확대할 것

- 공무원선택복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직원들이 단체보장보험이 아니더라도 보다 편리하게 치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

(3) 한국정보사회진흥원

- u-사회 실현의 역기능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정확한 IT 수준 평가를 위한 정보화 지수 개선할 것
- 연구개발망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-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률 제고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
-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안으로 u-Work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
- 초고속 인터넷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과장 광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
- URC 로봇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URC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
-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중소ASP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
- u-City/RFID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기술적·제도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
- 지자체 u-City 구축에 호환성 확보, 표준화, 보안·인증 제도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
-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행정DB구축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
- 경영평가 오류에 따른 재발 방지 및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

(4) 정보통신연구진흥원

-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를 2회로 늘리는 등 연구사업 평가 제도를 보완·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IT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특허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
- 2006년 응용기술개발지원 융자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내부 지침 등을 준수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
- 디지털 케이블과 디지털 지상파 방송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방송기술 인력양성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해외교수초빙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강의계획 변경 및 강의 폐쇄 등에 대한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

(5)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

- 인사규정 개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대면 이사회 원칙을 준수할 것
- SW발주자가 도급인력을 직접 관리하면서 도급인력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, 헤드카운트 방식의 계약관행도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- 데스크탑 OS에서 리눅스의 시장점유율이 1%에 불과하며, 교육기관에서도 윈도우 위주의 사용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공개SW 응용프로그램과 데스크탑 이용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

- SW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하며, 지식기반산업인 SW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SW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것
- SW제값받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중소 SW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

(6) 한국정보보호진흥원

- 스팸 전송 과정에 포함된 기간통신사업자, 광고주의 처벌방안 마련 등 스팸 근절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
- 인터넷상 주민번호 노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, 노출 점검 S/W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을 수립할 것
- '08년 하반기에는 정보보호제품 평가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
-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(i-PIN) 법제화와 관련한 부처간 충돌조율 및 기술적 불안,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한 i-PIN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
-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을 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
(7) 한국정보문화진흥원

-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의 보급기기 선정시 수혜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, 장애인의 웹 접근성 및 전자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
- 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중고PC보급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, 기증된 PC의 개인정보 삭제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
- 중증 장애인과 고령층 대상 정보화교육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, 취약계층의 정보활용 및 정보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
- 국제정보격차해소사업의 성과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유관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확대, 개도국 정보접근센터의 신속한 유지보수,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의 연수비용 절감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
-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확대하고 구축된 지식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포털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

(8) 한국인터넷진흥원

- 모바일주소(WINC : 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) 서비스 중 공공서비스를 최대한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
-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WINC를 국민들이 공용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

(9) 한국전파진흥원

- 한국전파진흥원이 정보통신망 이용료를 평일근무시간에 접속한 직원에 대해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

- IT 교수강화사업의 강사가 외국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 우수강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방안은 마련할 것
- 정부가 교육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
- 한국전파진흥원에서 통방융합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장기적인 진흥원 업무 영역을 정립할 것

(10)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

-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수행시 KOTRA 등과의 중복여부나 또는 상호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국제 협력사업과 중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- 중소 IT벤처기업들이 시장정보 및 해외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책 수립할 것
- 해외IT지원센터 거점재배치 관련 합리적인 재배치 선정절차를 마련할 것
- 중소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갖거나 글로벌마케팅 역량을 갖도록 노력해 줄 것
-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,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구체화할 것

3. 기상청소관

(1) 기상청

- 예보업무는 기상청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임. 기피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예보분야만이라도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처우 개선,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
- 보령기상관측소를 포함하여 중요지역의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승격하는 등 기상수요에 적절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
- 한반도에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남북기상협력의 활성화 대책과 남북기상협력에 소극적인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슈퍼컴 장애는 예보의 부정확도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슈퍼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
- 슈퍼컴 2호기 도입이후 예보정확도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할 것
- 슈퍼컴 도입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동시에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것
- 수치예보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수치예보 전문가의 양성·확충계획 및 고급인력 흡수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
- 생활지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용어를 정리하고, 생활지수의 명칭과 단계를 개선하며 민간기상사업체에도 기상청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

- 과학기술부의 과학TV에 기상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기상관측망에 대해 중복 투자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과 각 관측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 범정부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기상관측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
- 동해 부이의 자료 수집률이 낮고 장애가 잦은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부이의 유지보수는 안전성과 전문성 문제로 인해 직원이 직접 수행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- APEC 기후센터(APCC)의 조속한 국제기구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
-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
- 기상 콜센터의 적정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
- 예보관 교육 이수과정에서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실무와 이론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

(2) 국립기상연구소

-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논문은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업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
- 용역과제 선정시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

(3) 항공기상관리본부

- 항공기상정보 제공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

(4) 강원지방기상청

- 관·학 협동차원에서 강릉대가 수행중인 악기상센터 관련 용역에 충분한 협조방안을 강구할 것

(5) 제주지방기상청

- 향후 지진 및 지진해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이번(제주지방기상청의 2007년 7월 27일 13:40~15:00) 「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훈련」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하고 통보체계 등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

IV. 특기사항

1.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활동

- 2007년 10월 23일(월) 기초기술연구회 및 6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실시 중 대덕 영·유아 종합보육센터 건립현장을 시찰하여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음.